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2023. 7.



kipf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본 보고서는 2023년 6월 OECD에서 발표한
“Economic Outlook June 2023”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연구진

오종현	재정지출분석센터장
배진수	재정제도분석팀장
김진아	선임연구원
박신아	선임연구원
박지혜	선임연구원
장준희	선임연구원
변주하	위촉연구원

Contents

I	거시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1
	1. 서론	1
	2. 세계 성장은 안정화되나 회복세 취약 및 금융 부담 악화	6
	3. 성장 둔화 및 물가상승률 점진적 하락 전망	16
	4. 하방 위험 우세	21
	5. 정책 제언	32
II	경제성장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추진	49
	1. 서론	49
	2.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뒤쳐져 있는 여성 고용	52
	3. 성별 임금 격차와 유리 천장의 지속	55
	4. 경제적 충격과 빈곤에 더 취약한 여성	62
	5. 정책은 여성 고용을 지원하고 동등한 기회를 육성	63

Ⅲ	주요국의 경제 및 재정전망	74
1.	브라질	74
2.	캐나다	77
3.	중국	80
4.	유로지역	82
5.	프랑스	85
6.	독일	88
7.	인도	91
8.	이탈리아	93
9.	일본	96
10.	한국	98
11.	영국	100
12.	미국	103

I 거시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1. 서론

○ (동향) 세계 경제가 개선되기 시작했으나 상승세는 여전히 취약

- 에너지 가격 하락이 물가상승률을 낮추고 가계 예산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기업 및 소비자 심리는 바닥을 쳤고,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전면 재개는 세계 경제를 진작
 - 동시에 일부 부문의 높은 이윤과 노동시장의 높은 비용 압력으로 근원 물가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
-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의 영향도 특히 부동산 및 금융시장에서 점점 확대
 - 투자자들이 위험을 재평가하고 대출 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일부 금융시장 부문에서 스트레스의 징후가 발생

○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2년 3.3%에서 2023년에 2.7%로 하락한 후, 2024년 2.9%로 소폭 상승하지만 여전히 낮을 것으로 전망(〈표 1-1〉 참고)

- 제한적인 통화정책이 당분간 수요 증가를 억제할 것으로 보이고 2022년 긴축 정책의 완전한 효과는 올해 말 혹은 2024년 초에 나타날 전망
- G20 국가들의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및 식품 소매가격 하락, 수요 압력 완화, 공급 병목 현상 감소에 힘입어 2022년 7.8%에서 2023년 6.1%, 2024년 4.7%로 하락할 전망
 - 근원 물가상승률은 상대적으로 경직적이지만 주요 선진국에서 내년 말까지 목표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

○ (위험) 경제 전망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잔존한 가운데 하방 위험이 우세

- 물가상승이 예상보다 더 지속되면 통화정책의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의 갑작스러운 자산 재조정 및 위험 재평가의 가능성을 높임

- 이와 관련해, 매우 완화적인 정책이 장기간 지속된 후 연이어서 빠르게 인상된 정책금리로 인한 통화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우려됨
 - 금융여건 긴축이 금융시장에 스트레스를 촉발하고 금융 안정성을 약화시킬 경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 있음
 - 채권 포트폴리오 시장 가치의 급격한 변화는 유동성 및 듀레이션 위험을 높일 수 있음
 - 가계 및 기업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와 채무불이행 가능성의 증가는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증가시켜 대출 기준을 강화시킬 수 있음
 - 국제 금융여건이 예상보다 더 긴축되면 신흥국의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부채 상환 비용과 자본 유출을 가중시키며 해외 차입에 의존하는 차입자의 대출 가용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불확실한 진행 상황과 이에 따른 세계 에너지 및 식량 시장의 재혼란 가능성도 중요한 하방 위험
 - 반면, 빠른 종전으로 인한 불확실성 감소, 예상보다 완화된 금융여건, 경제활동 참가 증가, 가계와 기업의 축적된 저축을 통한 소비와 투자의 증가 등은 상방 위험 요인
 - 그러나 이러한 개별 충격들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할 수 있음
- (정책권고) 지속적인 물가상승률 하락, 재정 지원 조정,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회복에 대한 요구로 정책당국은 매우 어려운 도전에 직면
- (통화) 기초적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명확한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통화정책은 제한적일 필요
 - 근원 물가상승률이 높게 지속되고 있는 국가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음
 - 정책 결정은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과거 금리 인상의 누적된 영향을 검토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조정되어야 함
 -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추가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강화하고 전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가능한 금융 정책 수단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
 -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의무 간 상충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면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

- 물가상승률 기대 안착의 필요성과 국제 금융여건의 긴축으로 많은 신흥국들의 정책 여력이 제한
- 환율 압력이 발생하더라도 경제 기초여건을 반영하도록 통화를 가능한 변동되도록 하되, 국내 금융안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일시적인 외환시장 개입 또는 자본 이동 제한을 시행할 수 있음
- (재정) 미래 재정 소요에 대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재정지원은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해야 함
 - 팬데믹, 전쟁, 에너지 충격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음
 - 거의 모든 국가에서 팬데믹 이전보다 재정 적자와 부채가 증가했으며, 많은 국가에서 고령화, 기후 전환,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향후 지출 압력이 증가
 - 공공재정의 중기 경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미래 지출 및 과세 계획을 설정하는 신뢰할 수 있는 재정 프레임워크가 필요
 - 단기적으로는,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은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해야 함
 - 이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고 물가 인상에 대한 총수요 압력을 제한하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기초를 일치시키는 데 도움
- (구조개혁) 위기 상황, 잠재성장률 장기 하락, 고령화 및 기후 전환과 같이 시급한 미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야심찬 공급 촉진 구조 개혁이 필요
 - 노동 및 생산물시장의 제약을 줄이고 투자, 경제활동 참가, 생산성 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 노력은 지속가능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 회복 강화를 촉진
 - 기업 역동성 강화, 국가 간 무역 및 경제적 이주에 대한 장벽 완화, 유연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조성은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를 높이며 공급 제약을 완화
- (성평등) 지난 10년 동안 남녀 간 고용 및 임금 격차 축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뎠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기술 및 기회를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
 -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 부모 모두 적절한 육아 휴직 사용 장려,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세부담-재정수혜 제도 개혁, 기업 내 양성 평등 장려 등의 조치가 필요

- 이러한 조치는 성장 전망을 개선하고 포용성을 높이며 모든 인재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것임

○ **최근 세계 경제에 미친 충격들과 기후 변화와 같은 장기적이고 세계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 강화 역시 필요**

- 동시에,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의 국경 간 이동을 저해하고 많은 국가의 식량 불안을 야기하는 지정학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저소득 국가들의 부채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채권국 및 기관은 부채 부담이 지속가능할 수 있게 공동 조치를 취하고 저소득 국가들이 잃어버린 발전 시기를 겪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시급
- 더 일반적으로, 각국은 일부 영역의 마찰이 기후 변화 완화, 시장 개방, 경제 안보, 팬데믹 대응 등 공통 문제에 진전이 이뤄지는 것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함

〈표 1-1〉 완만한 세계 경제 성장 전망

(단위: %)

	2013~ 2019 평균	2021	2022	2023	2024	2022 Q4	2023 Q4	2024 Q4
실질 GDP 성장률 ¹⁾								
세계 ²⁾	3.4	6.1	3.3	2.7	2.9	2.3	2.9	3.1
G20 ²⁾	3.5	6.5	3.1	2.8	2.9	2.1	3.0	3.0
OECD ²⁾	2.2	5.7	3.0	1.4	1.4	1.4	1.3	1.6
미국	2.4	5.9	2.1	1.6	1.0	0.9	1.0	1.3
유로 지역	1.9	5.2	3.5	0.9	1.5	1.8	1.1	1.5
일본	0.8	2.2	1.0	1.3	1.1	0.4	1.7	0.8
Non-OECD ²⁾	4.4	6.5	3.7	3.9	4.1	3.1	4.3	4.3
중국	6.8	8.4	3.0	5.4	5.1	3.5	6.2	4.6
인도 ³⁾	6.8	9.1	7.2	6.0	7.0	-	-	-
브라질	-0.4	5.3	3.0	1.7	1.2	-	-	-
OECD 실업률 ⁴⁾	6.5	6.2	5.0	5.0	5.2	4.9	5.2	5.2
물가상승률 ¹⁾								
G20 ^{2),5)}	3.0	3.8	7.8	6.1	4.7	7.8	5.2	4.0
OECD ^{6,7)}	1.6	3.8	9.3	6.9	4.3	9.5	5.5	3.8
미국 ⁶⁾	1.4	4.0	6.2	3.9	2.6	5.7	3.2	2.3
유로지역 ⁸⁾	0.9	2.6	8.4	5.8	3.2	10.0	3.5	2.9
일본 ⁹⁾	0.9	-0.2	2.5	2.8	2.0	3.9	2.0	1.9
OECD 재정수지 ¹⁰⁾	-3.2	-7.5	-3.6	-3.6	-3.1	-	-	-
세계 실질 무역성장률 ¹⁾	3.4	10.4	5.0	1.6	3.8	0.7	3.4	3.9

주: 1) %, 마지막 3열은 전년 동기 대비 변화

2) 구매력 감안한 명목 GDP 이동 평균(Moving nominal GDP weights, using purchasing power parities)

3) 회계연도 기준

4) 경제활동 인구 대비 %

5) 헤드라인 물가상승률

6) 개인소비지출 디플레이터(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deflator)

7) 구매력을 감안한 명목 민간 소비 이동평균(Moving nominal private consumption weights, using purchasing power parities)

8) 조화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consumer price index)

9) COICOP 2018 분류 기준 소비자물가지수(National consumer price index)

10) GDP 대비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Table 1.1.

2. 세계 성장은 안정화되나 회복세 취약 및 금융 부담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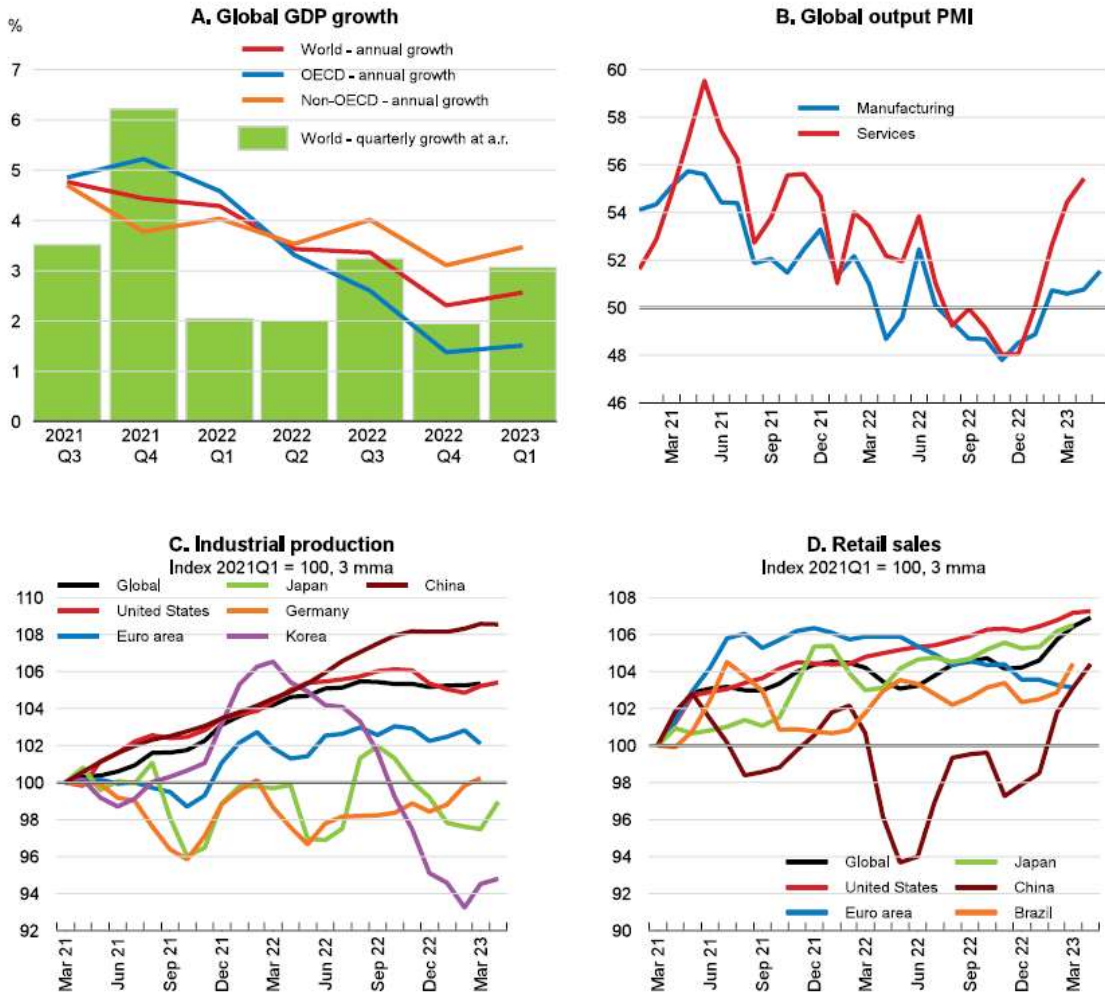
가. 2022년 세계 성장 약세 이후 2023년 개선 징후

○ 2022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성장이 크게 둔화([그림 1-1] 패널 A 참고)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식량, 비료, 에너지 가격의 급등은 2021년 이미 진행된 상승에 더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물가상승률을 크게 높이고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를 야기
- OECD의 GDP 대비 최종 사용 에너지 지출 비율은 2022년에 급증하여 1980년대 초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하여 기업의 비용을 높이고 가계의 구매력을 잠식
- 거의 모든 주요 중앙은행의 상당한 통화정책 긴축으로 인해 정책금리가 인상됐고 금리에 민감한 지출 요소들에 부담을 주기 시작
- OECD 경제의 둔화는 2022년 위축된 주택 투자가 주로 영향을 주었지만, 소비 지출과 기업 투자 부진도 일부 영향
- 2022년 4분기의 세계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2%(연율)로 낮아졌으며, 전년 대비로는 2.25%로 2021년에 비해 성장세가 절반 가까이 하락
- 2022년 4분기에 OECD 15개국의 GDP가 감소
 - 대부분 유럽 국가였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공중 보건 조치로 중국의 활동이 계속 억제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도 상대적으로 둔화
 -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로, 팬데믹 영향이 컸던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40년 중 최저치

[그림 1-1] 세계 성장 둔화 및 최근 경제활동 지표 혼재

(단위: A는 %, 그 외는 지수)



주: 1) 패널 A의 검은선은 해당 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연간 변화. 초록 막대는 연율로 환산한 전 분기 대비 증가율

2) 패널 C와 D의 세계 총합은 구매력 평가 기준 집계

3) 패널 D의 소매판매는 미국의 경우 월별 가계 소비, 일본의 경우 월별 실질 소비 활동 지표를 사용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Figure 1.1.

○ 2023년 1월 경제 지표가 개선되었고, 1분기 세계 경제성장률도 3%(연율)를 소폭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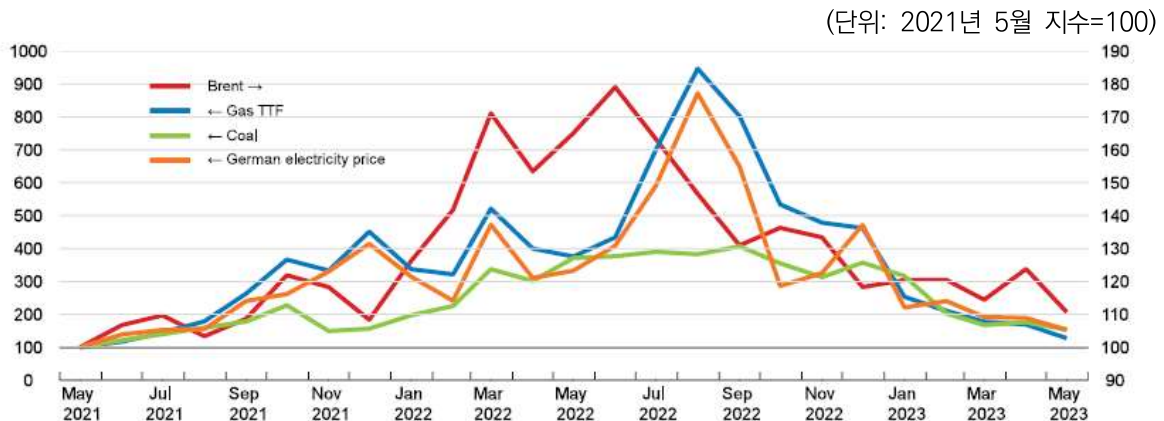
■ 국가별로 상이해 브라질, 중국, 인도, 일본은 성장이 반등했지만 미국은 둔화되었고 유로 지역과 영국은 GDP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침

■ 특히 서비스 부문([그림 1-1] 패널 B 참고)에서 기업 설문 조사가 2022년 말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며 소비자 경기심리지수도 작년의 매우 낮은 수준에서 회복하기 시작

○ 이러한 올해 초 개선은 에너지 가격 하락과 중국의 전망 개선에 일부 기인

- 에너지 원자재 가격은 지난 여름 이후 급격히 하락했으며 특히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그림 I-2] 참고)
 -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소매가격 하락에 아직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았음
- 석유 및 석탄 현물가격도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도달한 고점에서 크게 하락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대체적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 한편, 2022년 12월 중국이 예상보다 일찍 코로나19 제로 정책을 철회하고 재정·통화정책을 완화한 것도 기업 심리를 높임

[그림 I-2] 2021년 중반 수준으로 에너지 가격 하락



주: 가스 TTF는 네덜란드 가상 거래소(Dutch Transfer Title Facility), 석탄은 함부르크세계경제연구소 석탄 가격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Figure 1.2.

○ 최근 월별 경제 지표는 부문별로 상이

- 제조업 부문은 기술집약적 부문의 실적 부진이 일부 반영돼 특히 일부 아시아 경제에서 여전히 약세([그림 I-1] 패널 C 참고)
- 서비스 부문은 중국의 소비자 수요 반등과 미국의 견고한 성장에 힘입어 대부분 국가에서 개선([그림 I-1] 패널 D 참고)

- 금융여건에 민감한 내구재 수요는 약세 유지
- **(부동산)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부동산시장에서 점점 가시화되고 있음**
 - 2022년 하반기 모든 OECD 대국에서 주택 투자가 감소
 - 2022년 4분기 OECD 주택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
 - 특히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19%, 13% 감소했고 2023년 1분기까지 감소가 이어짐
 - 많은 국가에서 명목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높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질 가격은 더욱 하락
 - 임대료 대비 높은 주택 가격, 높은 가계 부채,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가격 변동이 더 큰 반면, 인구 증가율이 높고 고정금리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덜 두드러짐
 - 그렇더라도 많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하거나 몇 년간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 차입자는 더 많은 상환액에 직면
 - 경험적으로 실질 주택 가격 변동은 종종 경기변동과 관련
 - 1) 투자 감소와 가계의 자금 압박으로 인한 경제 활동의 상당한 지연과 2) 이와 관련된 금융부문의 부담에서 기인
- **(무역) 우크라이나 전쟁, 지정학적 긴장 고조, 원자재 가격 상승, 광범위한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역량은 2022년 상대적으로 견고한 5% 성장**
 - 공급망 병목의 점진적인 해소, 여행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의 지속적인 회복, 특히 아시아에서 코로나19 관련 여행 제한의 점진적 해제가 무역을 뒷받침
 - 연간 성장은 견고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는 7%(연율) 감소
 - 긴축적 통화정책, 산업 생산 둔화, 높은 재고 수준, 반도체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했고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아시아 내 무역이 제한
 - 2023년 1분기 세계 무역량이 1.8%(연율) 회복됐으나 세계 중개 무역은 약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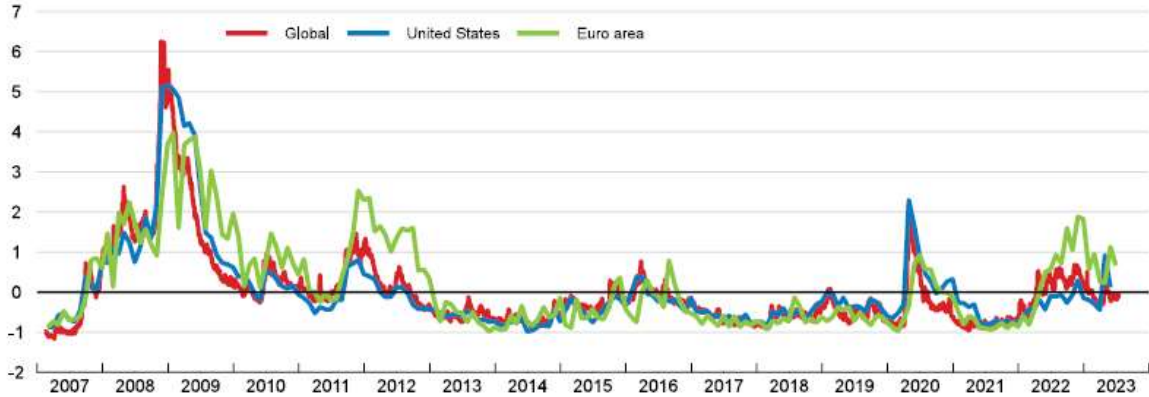
- 서비스 수출 주문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지만, 운송 가격과 선적 물량은 미미하고 제조업 신규 주문에 대한 조사는 낮은 수준을 유지
- 세계 공급망 병목 완화와 중국 경제 재개에도 불구하고, 총 교역량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상품 및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둔화돼 세계 무역 성장에 부담
- 전쟁 관련 무역 제한과 우크라이나의 주요 농산물 공급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세계 식량 수출은 상대적으로 잘 유지
 - 우크라이나의 밀, 옥수수, 보리 수출량은 2022년 9.1% 감소했지만 흑해 곡물 협정이 2022~2023년 5월 수출을 촉진하고 중동 및 아프리카의 식량 안보를 강화

나. 금융시장 여건 경색 및 변동성 증가

- 통화정책 긴축의 영향은 금융시장 움직임, 특히 신용여건과 장기 채권 가격에 점점 영향을 주고 있음
 - 은행 제도의 일부에서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나타나 시장 변동성을 높였지만 금융여건의 실질적이고 일반적인 추가 긴축을 야기하지는 않음
- 최근 몇 달간 일부 미국 지역 은행의 파산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제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의 강제 인수가 세계 금융시장에 긴장을 촉발
 - 은행 주가지수는 급락했고 미국과 유로 지역 은행들의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는 60~80bp 상승
 - 상승 폭이 높기는 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최고점에 비해서는 매우 낮았음
 - 부실 기관을 처리하고 은행의 유동성 압력을 해결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정책 조치는 금융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그림 I-3) 참고), 유동성, 듀레이션 및 신용 위험은 일부 금융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음

[그림 I-3] 제한적인 금융 스트레스

(단위: 표준화된 지표)



주: 1. 단기 자금, 주식, 채권, 신용, 외환 등 금융시장의 체계적 스트레스의 다양한 지표를 나타냄. 양(+)과 음(-)의 값은 각각 금융 스트레스가 장기 평균보다 각각 높거나 낮음을 나타냄. 자료는 표준화된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Figure 1.5.

○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과 자본 및 유동성 완충 자본 강화 필요성으로 인해 대출 조건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

- 은행 대출 기준은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 특히 미국과 유로 지역에서 이미 상당히 강화되었지만, 통화정책 완화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음
- 미국에서는 대출 기준이 과거 강화기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강화되었지만 아직 세계 금융위기 당시 정점에 도달하지는 못했음
- 다른 국가의 정책금리 변화는 예금금리로 빠르게 전이되었고 은행은 높은 자금 조달 비용을 대출금리로 전가하여 많은 국가에서 신용 성장이 둔화
- 유럽 대국을 포함한 몇몇 OECD 국가에서 주택 구입 자금 신규 대출이 급격히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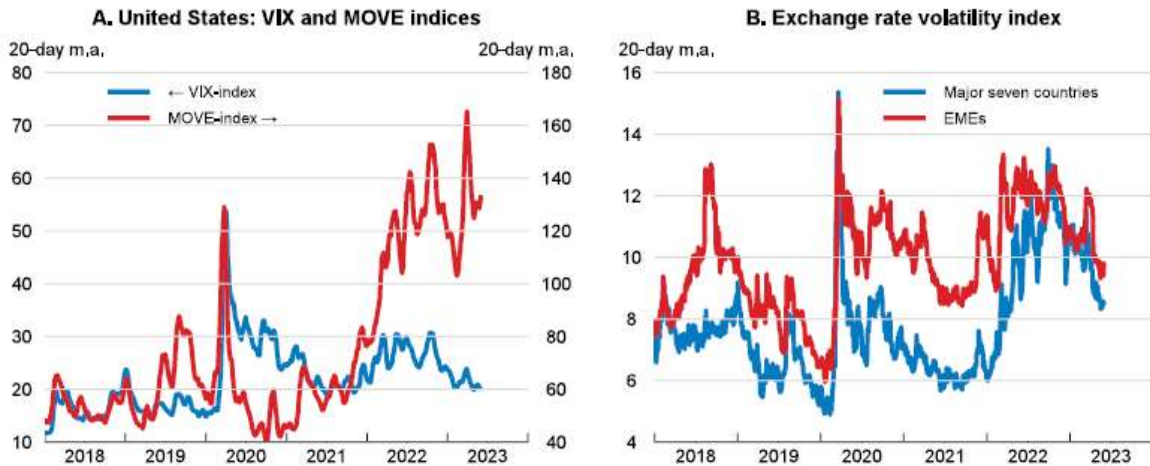
○ 시장 변동성은 높아진 반면, 위험 자산 가격은 최근 몇 달간 상승

-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시장 기대의 급격한 변화는 국채시장에 지속적인 변동성을 발생시켰으며([그림 I-4] 패널 A 참고), 팬데믹이 절정이었을 때 나타난 최고점을 경신
- 외환시장 변동성은 2023년 3월 정점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를 지속([그림 I-4] 패널 B 참고)

- 반면, 대부분 국가의 종합주가지수가 2022년 말 이후 상승했고 대부분 선진국의 은행 주가는 3월 저점에서 회복
-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미국에서 소폭 하락했지만 유로 지역과 영국에서는 상승했으며([그림 I-5] 참고), 외화표시 국채시장의 기간 스프레드는 일반적으로 확대
- 국채의 장기 실질금리는 세계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낮게 유지
- 유럽중앙은행 파급경로보호수단(Transmission Protection Instrument)과 유로 지역 중앙은행들의 채권 재투자에 힘입어 국가 신용 스프레드는 유로 지역 전역에서 억제된 상태를 유지
- 그러나 투자 등급보다 낮은 선진국 회사채를 중심으로 회사채 스프레드는 확대

[그림 I-4] 채권시장 변동성 급증

(단위: 20일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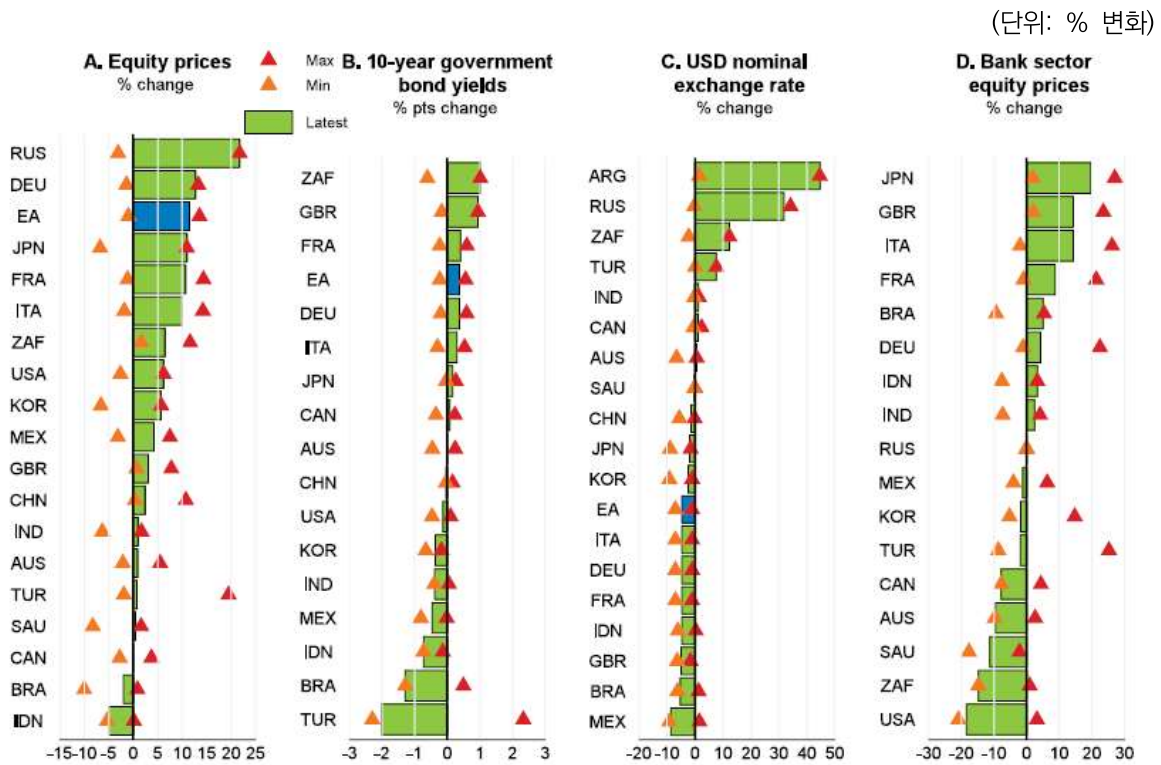
주: 1. VIX 지수로 측정된 내재 변동성은 위험에 대한 시장의 기대로 해석. MOVE 지수는 미국 2, 5, 10, 30년물 국채에 대한 1개월 옵션의 정규화된 내재 변동성에 대한 수익률 곡선 가중 지수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Figure 1.9.

-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정책금리 격차가 축소되고 미국 정책금리가 상단에 근접했다는 시장 전망에 따라, 미국 달러는 2022년 11월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 및 신흥국 통화에 대해 절하([그림 I-5] 패널 C 참고)
 - 이는 신흥국의 금융 스트레스 징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음

- 중국은 경제 재개에 따라 주가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일부 에너지 수출국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주가가 하락([그림 I-5] 패널 A 참고)
- 주요 신흥국에서 현지 통화 국채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하락했지만([그림 I-5] 패널 B 참고), 높은 물가상승률 또는 위험 프리미엄에 직면한 국가에서는 미국 국채 대비 스프레드가 높은 상태를 지속
-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미국 국채 대비 외화표시 국채 스프레드도 감소했는데, 이는 국가 신용 위험이 지금까지 억제되어 있음을 시사
- 신흥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 수익률은 여전히 2022년 고점보다는 낮지만 2022년 평균보다는 높음

[그림 I-5] 주식 및 채권 수익률 변동



주: 1. latest는 2022년 11월 평균과 2023년 6월 2일까지 가용한 최신 자료 사이의 변화. Max와 Min은 각각 2022년 11월 평균보다 가장 큰 증가, 감소폭을 의미. 일일 관측치의 10일 평균에 기반

2. 패널 C의 (+)는 절하를 의미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Figure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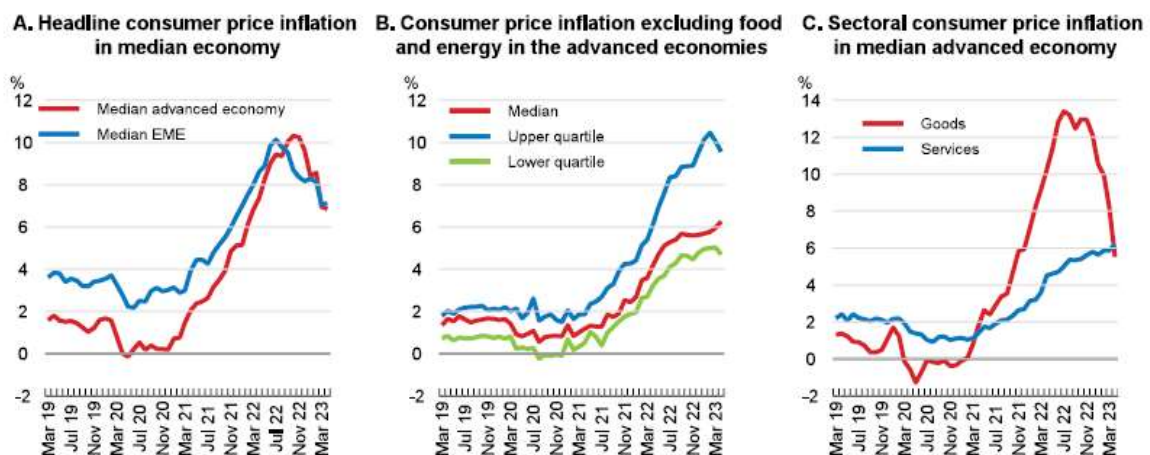
다. 높은 기조적 물가상승 압력

○ 최근 몇 달 동안 물가상승률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락했으나 근원 물가상승률은 많은 국가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그림 1-6] 참고)

- 식품 및 서비스 물가가 빠른 상승을 지속했음에도 에너지 가격 하락이 물가상승률 하락을 야기
- 반면 근원 물가상승률은 서비스 물가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높게 유지
 -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상품 물가상승률보다 변동이 적고 노동 비용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서비스 가격은 조정이 드뭄
 - 예를 들어, 소비자물가 구성 요소인 임대료(일부 국가의 경우 자기소유 주택 거주자의 귀속 임대료도 포함)는 시장 임대료(신규)의 움직임보다 지연됨
 - 또한 서비스 물가의 상승세는 팬데믹 초기 급격한 변화 이후 진행 중인 수요 패턴의 정상화를 반영
 - 서비스 수요는 팬데믹 이전 경로로 반등한 반면, 팬데믹 초기 급증했던 상품 수요, 특히 내구재 수요는 감소

[그림 1-6] 물가상승률은 하락한 반면, 근원 물가상승률은 지속

(단위: %)



주: 1. 2023년 4월까지 33개 선진국, 16개 신흥국의 연간 물가상승률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Figure 1.11.

○ 2021~22년 물가상승률 급등으로 실질임금이 여러 국가에서 하락했으며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도 감소

- 그러나 지속적인 고용 성장과 재정정책 지원이 일부 국가, 특히 유럽에서 가계 처분가능소득의 전반적인 감소를 제한하는 데 도움
- 가계 소득 감소와 가계 구매력 압력 증가는 기업이 단순히 증가한 투입 비용만 가계에 전가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익을 높였기 때문에 작년의 물가상승률이 높았음을 시사
- 국내에서 발생된 물가압력 지표인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은 단위당 이윤과 단위 노동 비용이 기여
 - 단위당 이윤의 상당 부분은 에너지 및 농업 부문의 높은 이윤이 기여했지만 제조 및 서비스 부문의 기여도 증가

○ 경제성장을 둔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대체로 경색 상태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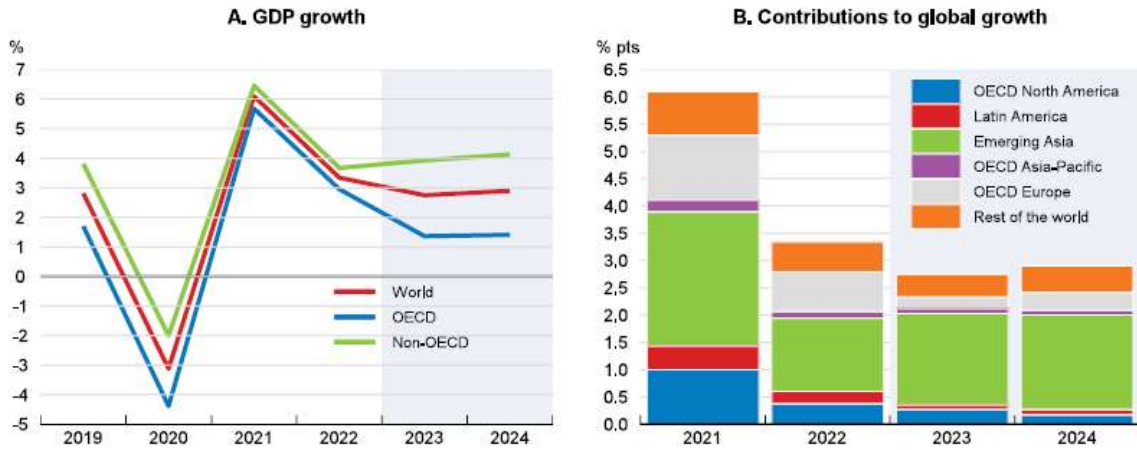
- OECD 전체 고용자 수 및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2년 4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고 실업률은 2023년 3월에 4.8%로 낮은 수준을 유지
- 노동공급 부족과 실질임금 하락은 명목임금 협상에서 임금 인상을 야기
- 현재 많은 선진국에서 노동시장 압력 완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
 - 높았던 빈 일자리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해고 비율이 증가했으며 파견 고용이 감소
 - 명목임금 인상이 일반적으로 안정화되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감소하기 시작

3. 성장 둔화 및 물가상승률 점진적 하락 전망

- 세계 경제는 올해 초 몇 달 동안 개선의 징후가 보였지만, 높은 전망 위험 속에서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상승이 지속될 전망
 - 2022년 초 이후 신속하고 동시적인 통화정책 긴축이 경제, 특히 민간 투자에 미치는 완전한 영향이 2023년과 2024년 초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큼
 -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상회하는 물가상승률에 직면한 중앙은행은 금리를 높게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국가는 팬데믹으로 악화된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축 재정 기조를 채택할 계획
 - 단, 차세대 EU 보조금을 통한 공공 투자 확대는 많은 유럽 국가에 일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팬데믹 기간 동안 축적된 추가 저축이 소비되면 수요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에너지 및 식량 원자재 가격 하락이 소매가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아 가계 소득의 압박은 지속될 전망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혼란 또한 세계 경제에 계속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음
-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3년 2.7%, 2024년 2.9%([그림 1-7] 패널 A 참고)로 전망
 - 2023년 성장률은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고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으며 2024년 역시 역사적으로 높지 않은 수치임
 - 점진적인 개선은 에너지 가격 하락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지만 주로 신흥국과 중국의 경제 재개가 동력을 제공
 - 또한 2023~24년 세계 성장은 주로 아시아가 기여([그림 1-7] 패널 B 참고)
 - 중국 경제 재개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예상보다 작을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이 약화

[그림 1-7] 세계 성장률은 둔화되고 아시아에 크게 의존할 전망

(단위: A는 %, B는 %p)



주: 1. 패널 B의 아시아 신흥국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홍콩,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라틴 아메리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페루. 기여도는 세계 GDP 대비 비중(구매력 평가 이동 평균 가중)으로 계산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Figure 1.16.

○ OECD 연간 경제성장률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1.4%로 추세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상승이 완화되고 실질 소득 성장이 강화됨에 따라 2024년 중 분기 성장률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

- 2023년 기업 투자는 OECD 국가에서 거의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 투자는 많은 국가에서 감소할 전망
- 전반적인 성장은 민간 소비와 정부 최종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에 의해 유지
 - 민간 소비는 올해 OECD 평균 저축률의 완만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뒷받침
- 2022년 모든 주요 OECD 국가에서 하락한 실질임금은 2023년에는 대부분 하락을 멈출 전망
- OECD 전체 고용은 2023~24년에 계속 증가해 소득을 뒷받침할 전망
- 가계의 경기심리 또는 부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이 발생하거나 노동시장 개선세가 둔화되면 소비 및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음

○ 구체적인 전망은 지역, 국가별로 상이

- (북미) 2021년 말 이후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최종 내수 성장이 둔화됐으며, 낮은 저축률과 강건한 고용 증가가 민간 소비 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일시적일 전망
 - (미국) 2022년 말부터의 강한 이월 효과에 힘입어 2023년 1.6% 성장한 후, 2024년 1.0% 성장 전망
 - (캐나다) 높은 인구 증가세와 회복력 있는 노동시장에 힘입어 2023년과 2024년 모두 1.4% 성장 전망
 - 양국 모두 2024년 말까지 물가상승률이 2%로 완화되는 데 도움을 받아 2024년 중 분기 성장률은 점차 개선
- (아시아 선진국) 물가상승률이 상승했지만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고 중국의 경제 재개가 역내 수요를 높일 전망
 - (일본) 정책 지원과 임금 성장 강화에 힘입어 추세를 상회하는 2023년 1.3%, 2024년 1.1% 성장률이 전망되며 기초적 물가상승률은 2024년 하반기 2%로 상승
 -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유지되고, 재정정책은 올해 대체로 중립적이다가 2024년에는 덜 부양적일 전망
 - (한국) 2023년 1.5%로 둔화된 후 2024년 2.1%로 회복할 전망
 - 거시경제정책이 이미 긴축되고 있고, 높은 채무상환 부담으로 내수 성장은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회복과 기술 경기 호전으로 수출은 증가할 전망
-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불확실성 증가의 영향을 받았으며, 현재 금리 인상과 재정건전화로 거시경제정책이 덜 부양적
 - (유로 지역) 2023년 0.9%, 2024년 1.5%로 상승 전망
 - 2023년은 경색된 노동시장과 가계 저축률 하락이 민간 소비를 촉진하고, 차세대 EU 프로그램으로 인한 지출 증가는 투자를 촉진하지만 자금조달 비용 증가와 대출 기준 강화가 투자를 저해
 - 2024년은 물가상승 완화에 따른 실질 소득 증가에 힘입어 성장률 상승

-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물가상승률은 매우 빠르게 하락할 전망이나, 근원 물가상승률은 경직적일 것으로 전망
- 현재 국가별로 크게 벌어진 물가상승률 격차는 점차 축소될 전망
- (영국) 실질 소득 성장이 개선되면서 경제성장률은 2023년 0.3%에서 2024년 1%로 상승
 - 재정 기조는 2개년 모두 긴축적이고 수출 증가세는 미약할 전망
 - 물가상승률 및 근원 물가상승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4년 말까지 물가 목표를 소폭 상회할 전망
- (아시아 신흥국) 중국은 코로나19 정책 해제에 따른 반등이 기대되며, 지난해 높은 성장을 보였던 인도, 인도네시아는 통화·재정정책 긴축이 일부 영향
 -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에 주로 기인해 2023년 G20 중 가장 높은 5.4%의 성장을 보인 후, 반등이 소멸되면서 2024년 5.1%로 완화
 - 코로나19 억제 정책 변화는 대면 서비스에 대한 억눌린 수요를 풀고 소비자 경기심리를 높이며 부동산 부문의 침체를 완화
 - 중국은 2022년 물가인상 압력이 거의 없었던 이례적인 국가였으며 이후에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인도) 금융여건 경색으로 내수가 억제되어 2023-24회계연도에 6.0%로 하락 후, 2024-25회계연도에는 낮은 물가상승률과 강한 대외 수요에 힘입어 7.0%로 상승
 - (인도네시아) 견고한 기업·소비자 경기심리와 중국의 강력한 해외 관광에 힘입어 2023~24년 경제성장률이 5%에 근접할 전망
- (중남미) 물가 대응을 위한 긴축적 거시경제정책, 수출 시장의 약한 성장, 핵심 수출 원자재 가격 하락에 기인해 2023년 대부분 중남미 국가의 성장률이 급락한 후, 2024년에는 물가상승 둔화, 통화정책 긴축 완화, 대외 수요 강화에 힘입어 경제가 회복될 전망
 - (브라질) 사회 이전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질 이자율과 취약한 신용 성장으로 내수가 억제돼 2023년 1.7%, 2024년 1.2%로 완만한 성장을 보일 전망
- (무역) 세계 무역 성장은 경제성장 둔화와 2022년 말 약세의 이월 효과 등으로 2023년 1.6%로 둔화된 후 2024년 3.8%로 회복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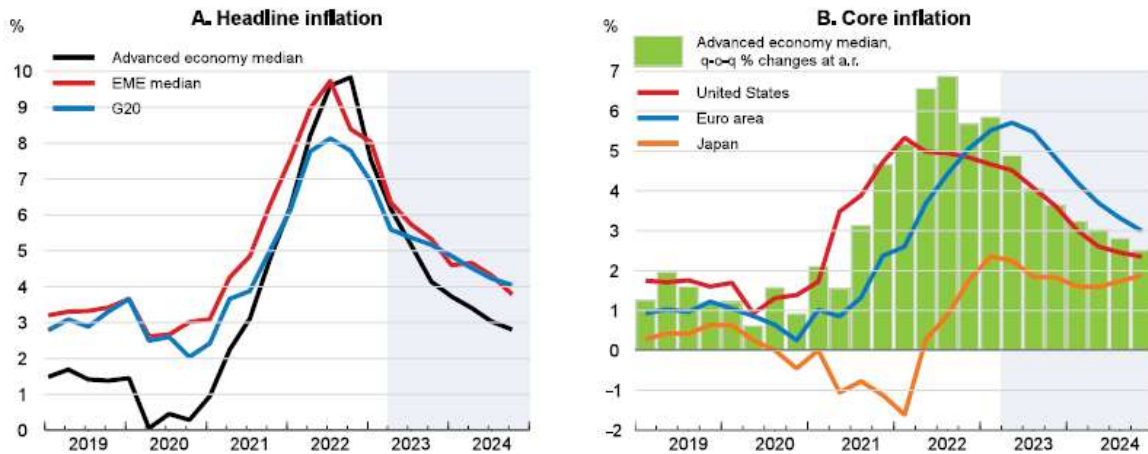
- 낮은 원자재 가격과 중국의 전면 재개가 2024년 말까지 무역 성장을 지원할 것이나, 기저 효과로 인해 2023년 연간 성장률은 낮게 유지
- 통화정책 긴축에 따른 파급 효과도 특히 미국에서 2024년까지 지속될 전망
- OECD 무역 증가가 중국의 무역의존도¹⁾ 약세를 상쇄함에 따라 무역의존도는 2023년 하락 후 2024년 회복할 전망
- 중국 경제 재개에 따라 해외여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서비스 무역 증가가 상품 무역 증가를 넘어설 전망
- 경제성장, 무역 재제, 중국 경제 재개 등에 따라 무역 전망이 달라질 수 있음
 - 성장이 전망보다 낮아지거나 러시아 무역 제재로 인한 2차 영향이 무역 반등세를 제한한다면 무역 회복세는 약화될 수 있음
 - 반면, 제조업과 해운업의 공급망 압력이 거의 줄어들고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 설비가동률 여력이 높기 때문에, 국내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된다면 무역 회복세가 빨라질 수 있음
 - 중국 관광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상화되는 등 세계 여행 서비스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무역 성장이 더 빨라질 수 있음
- (노동) OECD 실업률은 2022년 말 4.9%에서 2024년 4분기 5.2%로 상승할 전망이며, 유로지역은 소폭 상승, 호주, 뉴질랜드, 영국 및 미국은 약 0.75%p 이상 상승할 전망
 - 성장률 둔화가 실업률을 어느 정도 높일지에 따라 전망이 크게 달라짐
 - 지금까지 많은 선진국이 한 분기 이상 역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일부 국가는 지속적으로 하락
 - 반면, 수요 약세에 대한 조정으로 빈 일자리 수는 현재 많은 OECD 국가에서 감소하고 있고, 근무 시간은 일부 국가에서 감소하기 시작
 - 노동시장은 경색 상태를 유지하고, 2022년 실질임금이 하락하면서 2023년 OECD의 명목임금 증가율은 4%를 소폭 상회한 뒤 2024년 3.5%로 완만한 수준을 보일 전망

1) GDP 대비 수출입 비중

- (물가) OECD 연간 물가상승률은 지난 몇 달 동안의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 2022년 9.4%에서 2023년 6.6%, 2024년 4.3%로 빠르게 하락할 전망([그림 1-8] 참고)
 - 주요 선진국의 물가상승률은 2024년 4분기 2.25%를 소폭 상회해 목표치에 근접할 전망
 - OECD 근원 물가상승률은 2022년 6.6%에서 2023년 6.5%, 2024년 4.5%로 하락
 - 물가 경직성과 마진 및 비용의 느린 조정을 반영해 물가상승률보다 하락세가 저조

[그림 1-8] 물가상승률 완화 전망

(단위: %)



주: 1. 선진국과 신흥국 중앙값은 각 경제의 중위 물가상승률. 34개 선진국과 16개 신흥국 전망에 기반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Figure 1.18.

4. 하방 위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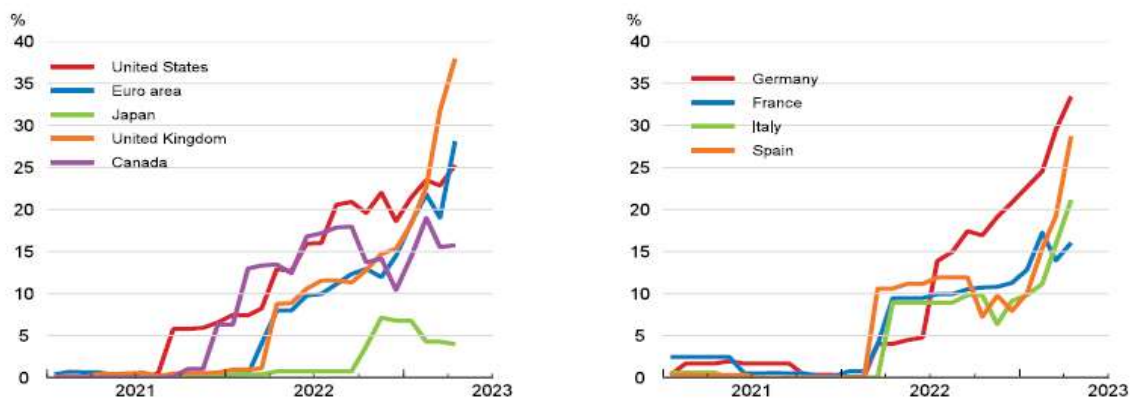
가. 높은 물가상승 및 금리 지속가능성

- 물가상승이 예상보다 더 지속되고 이에 대응해 금리도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향후 성장이 전망보다 악화될 수 있음
 - 지난 18개월간 기초적 물가상승률이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상회
 -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 대규모 충격과 물가상승률 추가 상승에 기여하는 다양한 수급 요인들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속도를 추정하기 곤란

- 이와 관련하여 저금리가 장기화된 후 이미 시행한 통화정책 긴축의 영향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도 존재
 - 이자율 상승이 예상보다 작거나 지연 효과가 있거나 비용 압력이 예상보다 덜 빠르거나 기업이 가격 인상폭을 높이려고 하면 물가상승률은 예상보다 상승
 -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더 긴축되어야 하고 아마도 더 오랫동안 제한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면 기대 물가상승률 상승 및 물가연동 인상에 따라 다시 물가가 상승할 수 있음
 - 12개월 이상 연간 물가가 5% 이상 상승한 소비자물가 품목 비중이 증가
 - 이 비중은 2021년 초 거의 0에 가까웠지만 2023년 4월에는 평균적으로 약 1/4, 특히 독일과 영국에서는 1/3 이상으로 증가(그림 I-9) 참고)
 -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것이 지연되면 이 비중이 더 높아져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문제가 더 심화되고, 시장 및 민간 부문 물가상승률 기대치가 목표보다 훨씬 높아질 위험이 증가
 - 또한 계약과 금융 자산이 물가와 더욱 연동될 수 있고, 이 경우 물가상승이 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그림 I-9] 물가상승이 예상보다 더 지속될 가능성

(단위: %)



주: 1. 미국의 경우 개인 소비 지출 디플레이터, 유로 지역과 영국의 경우 조화 소비자 물가 지수(HICP), 그 외 국가의 경우 국가 소비자 물가 지수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Figure 1.19.

○ 다른 요인들도 물가상승 지속에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이 악화 또는 확산되면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
- 마찬가지로, 올해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게 반등하면 다양한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켜 물가상승률 하락세가 제한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책금리가 전망보다 오랫동안 더 높게 유지되면 경기 둔화 가능성과 금융 스트레스 위험이 증가

나. 금융여건 경색의 금융시장 스트레스 유발 가능성

○ 통화정책이 더욱 제한됨에 따라 금융여건 긴축이 예상되며, 이러한 긴축이 광범위한 금융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 금융여건이 긴축되면 투자자들이 유동성, 듀레이션 및 신용 위험에 대한 노출을 신속하게 재평가하기 때문
- 은행 부문에 새로운 취약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결과 광범위한 신뢰 상실과 급격한 신용 위축을 야기하고 비은행 금융 기관의 유동성 불일치 및 레버리지로 인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 은행 제도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규제 개혁으로 자본 및 유동성 상태가 강화되고 대형 은행이 더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는 등 위기 이전보다 더 회복력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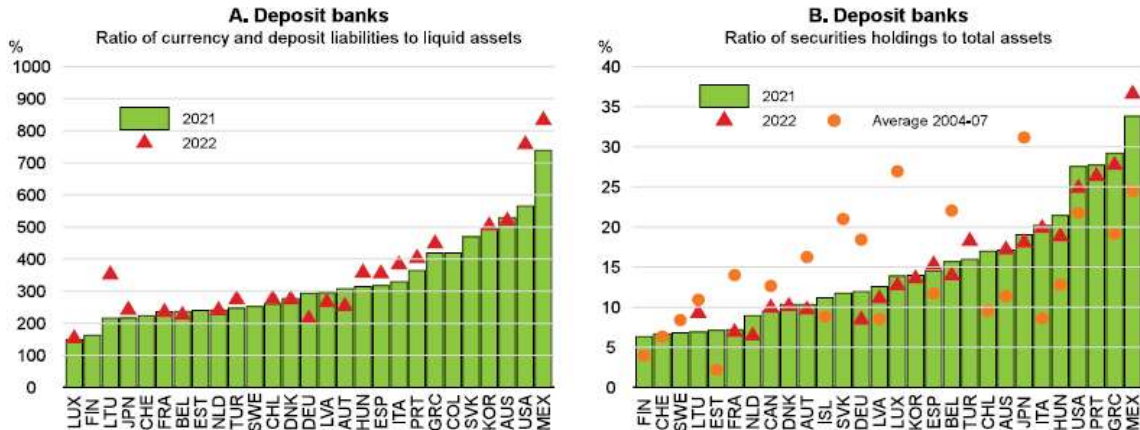
- 3월 미국 은행 파산 이후 은행 부문 압력이 국가 간 확산되는 속도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심리는 여전히 취약하지만, 선진국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은행은 적절한 유동성과 자본을 갖춘 것으로 보임
- 게다가 자본 비율은 규정보다 높고 부실채권 보유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르면 대형 은행은 일반적으로 빠른 금리 상승과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에 대처할 수 있는 양호한 상태에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과 유럽의 사례는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환경에서 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할 경우 은행이 심각한 듀레이션 및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
 - 2021년 초 이후 대규모 선진국에서 예금 증가율이 둔화되었고 많은 국가에서 최근 예금액이 감소
 - 채권 수익률이 빠르게 상승하면 과거 긴축 정책 시기에서 보았듯이 저축자들은 은행 예금을 단기자금시장으로 옮겨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

- 금리가 상승해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유동성 및 듀레이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손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현되지만, 은행이 예상하지 못한 예금 인출을 충족하기 위해 채권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 빠르게 구체화될 수 있음
 - 국가별로 크게 다르지만 멕시코, 미국과 같이 유동 자산 대비 단기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은행들은 대규모 예금 인출로 인한 유동성 위험에 취약할 수 있음([그림 I-10] 패널 A 참고)
 - 총 자산 대비 국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멕시코, 미국 및 일부 유럽 은행들도 듀레이션 위험에 잠재적으로 취약할 수 있음([그림 I-10] 패널 B 참고)
 - 은행의 대규모 손실과 낮은 유동성 전망은 은행 위험 가격의 급격한 조정과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 조건이 강화될 수 있음

[그림 1-10] 국가별로 상이한 은행의 유동성 및 듀레이션 취약성

(단위: %)



주: 1. 패널 A의 비율은 유동자산(통화, 예금, 단기채무증권)의 합계 대비 통화와 예금부채(은행 간 부채 포함)로 계산. 패널 B는 2021년 말과 2022년 4분기 또는 2022년 최신 가용 분기 데이터를 사용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Figure 1.21.

○ 또한 은행은 기업과 가계가 부채 상황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신용 손실 증가 압력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규 신용 공급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음

- 많은 국가에서 2022년 민간 부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금리가 가장 최근 급등했던 2000년대 초반보다 이미 높음
- 특히 민간 부채 수준이 높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정책금리 인상이 대출 조건 강화로 전가됨에 따라 부채 상황을 할 수 없는 차입자의 비율이 증가할 수 있음

○ 주택 또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될 경우에도 가계 및 기업의 지급능력 위험이 증가해 은행이 대규모 잠재적 손실을 볼 수 있음

- 상업용 부동산 거래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했으며, 상업용 부동산 가격도 주요 선진국에서 하락하기 시작
- 2022년 4분기까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미국과 유로 지역에서 최근 최고치 대비 각각 1.8%와 2.9% 하락했으며, 부동산 투자 펀드 평가를 기반으로 한 월별 지표는 올해 더 급락할 것으로 평가
- 부동산시장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대규모 급매나 압류가 발생하면 은행은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손실이 실현될 수 있어 가용 담보의 가치가 감소

- 상업용 부동산은 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조정은 미국 지역 은행 대차대조표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음
 - 게다가 몇몇 국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파산 및 연체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미 자산 건전성 악화 징후가 일부 나타났는데, 더 높은 손실 충당금 및 자본 상태 보충 조치가 요구될 수 있음
- 또한 유럽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정부의 팬데믹 지원으로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장기간 머물렀던 기업 파산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여러 신호가 발생
- 기업이 직면한 에너지 비용 및 부채 상환 비용 상승을 고려할 때 기업 파산 증가는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파산 급증은 비은행 금융 기관을 포함한 대출 기관의 대차대조표에 추가적인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음
- 한편 유동성 불일치, 파생 상품 및 기타 형태의 레버리지 운용으로 인해 위험에 크게 노출된 비은행 금융 기관의 증가도 위험 요인
- 비은행 금융 기관은 현재 세계 금융 자산의 약 50%를 차지하며, 세계 금융위기 이전보다 비중이 더 증가
 - 비은행 금융 기관의 기업 대출은 2022년 유로 지역과 영국의 비금융 기업 총 대출 잔액의 각각 20%, 50%를 차지하고, 가계 대출 역시 2021년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의 70% 이상을 차지
 - 레버리지 거래에 대한 상당한 마진 콜을 충족하기 위해 자산에 대한 대규모 시가 평가 손실을 실현해야 하는 경우, 금리 상승과 자산 가격 하락 환경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고, 신속한 정책 조치가 없으면 자산시장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음
 - 또한 비은행금융기관이 자금 유출을 감당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 악순환이 발생해 부정적인 시장 움직임이 증폭되고 비금융 기업의 자금조달 조건이 강화될 수 있음
 - 특히 단기금융펀드는 채권 보유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대규모 상환 요구에 취약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부동산 투자 펀드도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되면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음

○ NiGEM 세계 거시 경제 모델을 통해, 선진국의 금융 스트레스가 가계 및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예상보다 증가시켜 성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분석

- 가계 예대 금리차 1%p 확대, 자본의 사용자 비용 1%p 상승, 주식 위험 프리미엄 0.5%p 상승 등 세 가지 금융 충격을 상정
 - 이러한 충격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과거 스트레스 시기에서 보였던 변화의 1/4~1/2 수준
 - 세계 금융위기와 달리, 충격이 신흥국의 금융시장으로 직접 확산되지는 않는다고 가정
 - 가계와 기업은 대출은 가능하지만 이전보다 비용이 증가
 - 충격은 2023년 하반기와 2024년에 발생되고 이후 소멸되며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간주
- 주어진 정책 하에서 2024년 OECD 경제성장률은 약 1.25%p, 세계 성장률은 거의 1%p 감소
 - 기준선 전망을 고려하면 이러한 예측은 많은 선진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하거나 가까워짐을 의미
 -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소득, 자산 가격, 국내 수요가 영향을 받고 민간 투자는 기준선 대비 약 7% 감소
 - 주요국에서 주가는 10% 가까이 하락하고 실업률은 약 0.5%p 상승
 - 물가상승률은 OECD에서 약 0.4%p 하락
 - 비 OECD 성장률이 약 0.7%p 하락하는 등 신흥국은 선진국의 수요 감소로 인해 악영향을 받음
 - 금융여건 경색이 경기심리를 떨어뜨리거나 특정 부문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면, 충격의 악영향은 더 확대
- 거시경제정책은 이러한 충격의 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특히 정책금리를 낮추면(기준선 대비 50bp) 2024년 세계 GDP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약 1/4만큼 감소
 - 재정정책 역시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증가하고 자동안정화장치가 완전히 작동하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음

- 재정 조정이 없더라도 GDP가 낮아져 선진국의 2024년 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의 중앙값은 약 2%p 더 높음

다. 금융여건 경색으로 신흥국 취약성 악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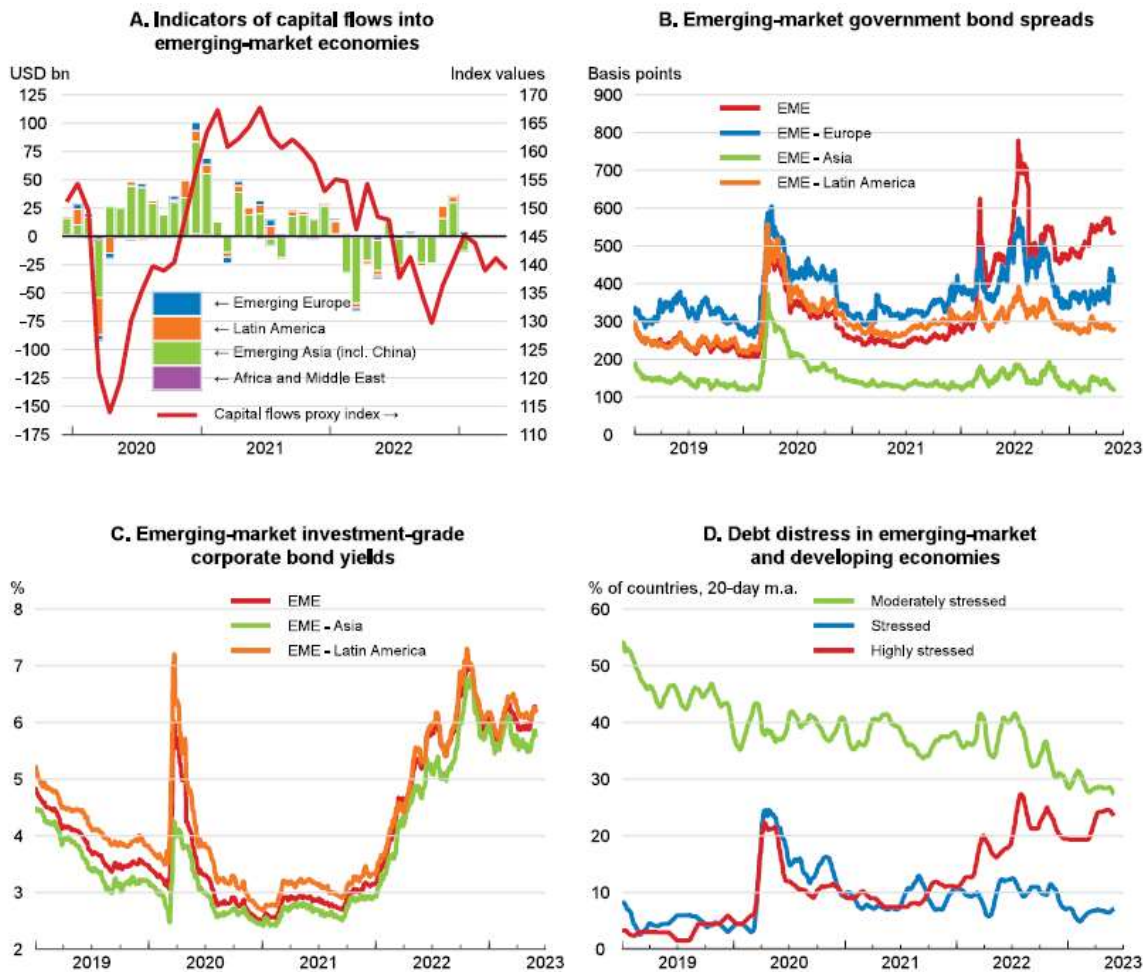
○ 신흥국 금융시장 여건은 2022년 11월 이후 대체로 안정적이거나 취약성은 증가

- 미국 달러 절상이 멈췄고 중국의 경제 재개는 일부 원자재 수출국의 성장 전망을 높였으며 주요 선진국의 최근 은행 스트레스로 인한 파급 효과는 제한적
- 그러나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대외 부채 증가, 국내 국채에 대한 대형 은행 위험노출도가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취약성을 악화
- 몇몇 저소득 국가는 국채 스프레드 증가와 달러 표시 부채에 대한 의존도 증가로 인해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자금조달 여건이 더욱 경색

○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채권 발행이 감소하고 스프레드가 증가

- 2022년 국채 발행이 약 7% 감소하고 회사채 발행도 감소
- 선진국의 수익률이 더 높아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도 둔화([그림 I-11] 패널 A 참고)
- 외화표시 국채 스프레드와 회사채 수익률은 3월 초 이후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지만 2022년 최고점 아래에서 머물고 있음([그림 I-11] 패널 B, C 참고)
- 특히 부채가 많은 저소득 국가에서 부담이 컸는데, 이들 중 많은 국가는 현재 국가 부채 위기에 처해 있음
- 62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중 약 1/4은 현재 외화표시 국채 스프레드가 10%p를 초과하며([그림 I-11] 패널 D 참고) 3년 내 만기 국채 비중이 40%를 상회

[그림 1-11] 최근 신흥국의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주: 1. 패널 A는 21개 신흥국의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에 대한 OECD 자료와 블룸버그 대리 지수(지수 상승은 신흥국으로의 자본 유입). 패널 B는 JP모건 EMBI 글로벌 채권 스프레드. 패널 C는 ICE Bank of America Investment Grade Emerging Markets Corporate Plus Issuers 수익률. 패널 D는 JP모건 EMBI 글로벌 채권 스프레드가 300~700, 700~1000, 1000~이면 각각 저, 중, 고로 분류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Figure 1.24.

○ 세계 금융위기 이래로 신흥국에서 대외 부채와 국내 은행 부문의 국내 국채에 대한 위험노출도가 증가했지만 위험의 성격은 국가마다 상이

- 대외 부채가 많은 국가 중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튀르키예는 단기 금융 수요가 2022년 GDP 대비 15%p를 상회
 - 2022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중위 신흥국에서 0.8%p 확대되었고 원자재 수입국에서는 더 확대되었으며, 이는 주로 무역수지 악화에서 기인

- 또한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등 상대적으로 대외 부채가 많은 일부 국가들도 투자소득수지가 급감
 - 해외 직접 투자 유입은 2022년 G20 신흥국에서 35% 감소했지만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를 포함한 몇몇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는 경상수지 적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규모를 유지
 - 다른 국가에서는 단기 대외 자금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롤오버 위험에 대한 노출이 증가할 위험
- 아르헨티나와 이집트와 같이 은행 부문의 정부에 대한 위험 노출도가 큰 국가에서는 신뢰 상실 또는 인지도된 국가 신용 위험이 더 높아지면 국가와 은행 대차대조표 사이에 악순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 신흥국에서 은행이 신용의 주요 출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민간 부문의 자금 조달과 성장을 방해할 수 있음
-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은 잠재적인 금융 긴장 외에도 가뭄과 같은 중기 기후 관련 위험에 계속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성장 전망을 저해하고 물가상승 압력을 다시 촉발할 수 있음
 - 특히 식품 소비 비중이 높거나 식량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 극심한 기후에 대한 낮은 회복력은 장기적인 물가인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

라. 에너지시장 위험 잔존

- 유럽의 심각한 에너지 공급 부족 위험이 감소하긴 했으나 소멸되지 않음
 - 가스 저장 수준은 지난 우려와 달리 연중 최고 수준에 근접
 - 북반구의 따뜻한 겨울,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 일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의 생산 감소, 높은 가격 등으로 소비가 급감
 - 액화천연가스 수입도 일부 국가의 신규 해안 저장 시설에 힘입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러시아 수송관을 통한 일부 잔여 수입 물량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24년 겨울을 대비해 충분한 저장 수준을 확보하는 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에너지 가격이 재상승하여 소비자 물가가 다시 급등하고 경제적 혼란이 심화될 수 있음

- 2023년 러시아로부터의 공급은 2022년 초반과 달리 미미할 가능성이 큼
- 중국 수요의 잠재적인 반등은 세계 액화천연가스 공급 경쟁을 심화
- 원유시장에서도 OPEC 산유국의 감산과 서구의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 제재 조치가 2023년 내내 세계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유가 상승 위험이 있음

마. 상방 위험

○ 한편, 긍정적인 거시경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방 위험 요인도 존재

- 팬데믹의 추이와 경제 활동 재개에 따라 성장 및 고용이 증가할 수 있음
 - 2020년 이래로 성장, 고용 및 물가상승의 움직임이 팬데믹과 그에 따른 정책 대응에 크게 영향 받음
 - 팬데믹의 예외적인 특성과 경제 활동 재개는 이러한 동학이 어떻게 진화할지에 대해 필연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이 있음을 의미
 - 특히, 예상보다 강한 경제활동 참가는 산출량을 늘리고 물가상승률 하락을 촉진
 - 팬데믹 초기에 국제 이주가 사실상 동결되었다가 그 이후 많은 선진국으로의 이주 흐름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2020~21년 중단으로 인한 추격을 부분적으로 반영
 - 순 유입이 계속되면 해당 국가의 경제활동 참가가 전망보다 개선
 -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도 팬데믹으로 인한 국내 노동공급 감소가 해소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
- 실업률 증가가 미미하고 구직 대비 초과 구인이 감소하여 노동수요가 진정될 수 있다면, 동일한 물가상승률 하락하에 더 높은 경제성장이 달성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팬데믹과 관련된 수요 구성의 변화의 지속적인 완화가 예상보다 더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현재의 서비스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신흥국에서는 더 나은 금융여건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포함한 투자와 민간 부문 대차대조표를 개선할 수 있음

- 이는 전반적인 투자 및 성장 전망을 높이고, 자본 유입 급감 또는 자본 유출 대한 국가의 취약성을 줄이는 데 도움
- 물가상승 전망을 악화시키지만 성장 전망을 개선시키거나, 또는 그 반대의 상황을 발생시킬 수 없는 수많은 가능성 존재
 - 올해 중국의 예상 반등이 흔들리거나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예상보다 강하면 세계 물가인상 압력을 전망보다 빠르게 낮추지만 세계 성장을 약화
 - 반면에 팬데믹 시기에 축적된 초과 저축이 추정치보다 많거나 전망보다 빨리 소비된다면 물가상승 둔화 속도는 저해되지만 성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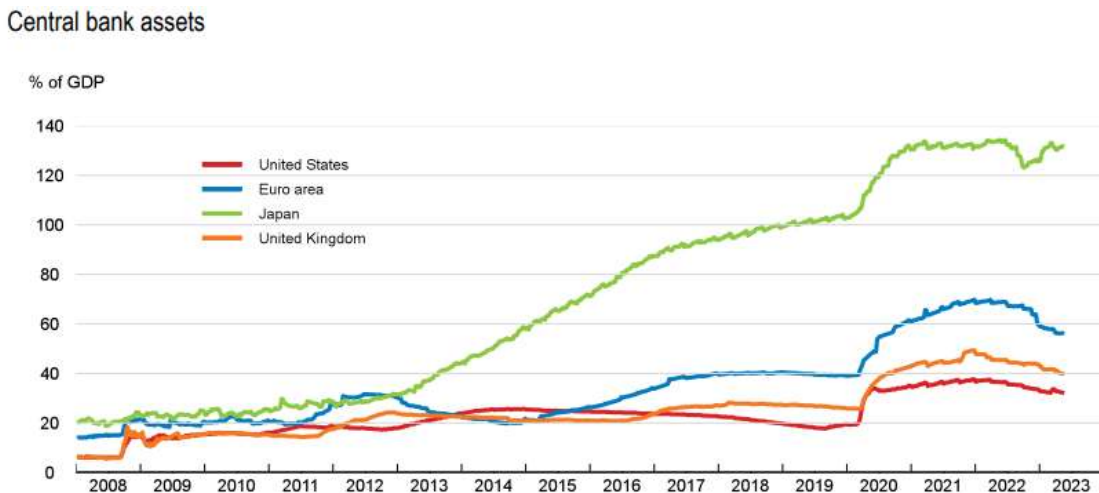
5. 정책 제언

- 세계 경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 완만한 성장 전망 및 상당한 하방위험으로 어려운 정책과제에 직면
 - 물가상승 압력의 지속적 감소를 위해서는 당분간 높은 금리가 요구됨
 - 추가적인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은 적절한 유동성 확보, 확산 위험 최소화를 위해 사용가능한 정책도구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
 - 높은 식품 및 에너지 비용 영향 완화를 위한 에너지 가격 인하 및 사회적 혜택은 일반적인 사회보장체제로 지원되지 않는 취약 가구만을 대상으로 선별적 시행 필요
 - 이는 에너지 사용 감소 유인을 강화하고 물가상승에 대응하는 통화정책을 지원
 - 대부분의 국가는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부채 상태에서, 고령화 및 기후 변화로 인한 미래의 추가적 지출요구에 직면함에 따라 부채 지속가능성 확보에 더욱 주목할 필요
 - 미래의 정책 우선순위를 충족하고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족한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재정여력을 재구축하는 것이 필수
 - 인구고령화, 기후 변화, 디지털화 등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더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제의 규모와 편재성을 고려할 때 성장 활성화 및 성장의 질 향상을 위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됨

가. 선진국의 경우, 당분간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

- 대부분의 선진국 중앙은행은 지난 3월 금융시장 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달 동안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하였으나 정책금리 인상 폭 축소 경향이 나타남
 - 일부 은행은 선도적(forward-looking) 실질 단기금리가 양(+)이 됨에 따라 이미 시행된 누적 긴축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금리 인상 일시 중단을 발표
 - 또한 많은 중앙은행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원리금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재투자하지 않거나(수동적 양적 긴축) 채권을 매도(능동적 양적 긴축)함으로써 보유 채권 감소
 -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규모 감소에 도움
 - 다만, 지난 3월의 은행부문 스트레스 대응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으로 일부 지역에서 중앙은행 자산이 일시적으로 증가([그림 I-12] 참고)

[그림 I-12] 주요국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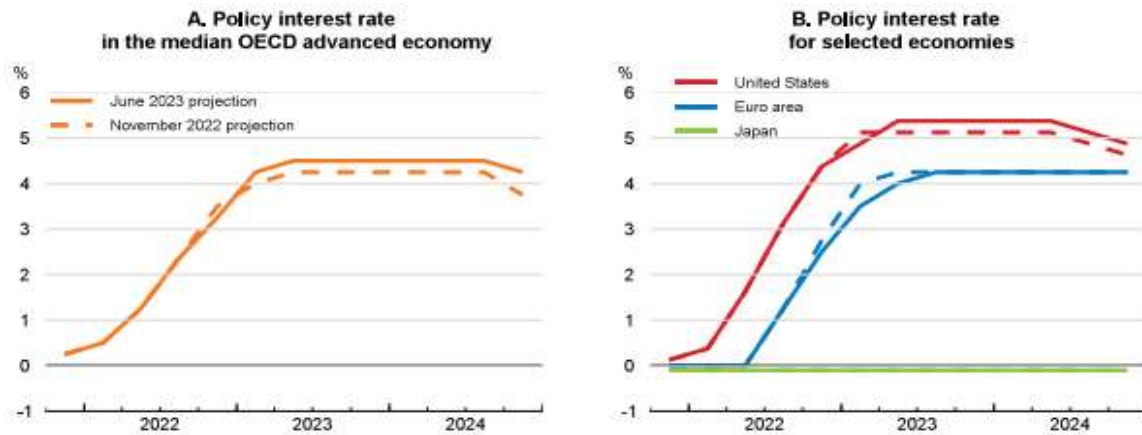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Figure 1.26.

- 수요 압력이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인 경우, 지속적으로 자원 압력을 낮추고 디스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 위해 몇 분기 동안 양(+)의 선도적 실질금리와 추세 이하의 성장이 필요(OECD, 2022b²)

- 그러나 금리 인상 효과의 파급 속도, 다른 국가의 제한적 정책으로 인한 파급효과, 긴축적인 금융여건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국내 통화정책의 정교한 운용이 어려우며, 정책은 새로운 데이터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
 - 금융 및 주택시장에서 긴축 통화정책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근원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명확한 징후는 관찰되지 않음
 - 많은 국가들의 동시 긴축은 잠재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목표치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시간을 늘릴 수 있으며, 이는 긴축이 전 세계 수요 약화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국내정책 시행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시키는 것에 기인
 - 중앙은행의 제한적 정책기조를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입장과 정책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지속적인 의사소통 노력이 필요
-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책금리는 최고점에 도달했거나 향후 몇 개월 내에 최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그림 1-13] 참고)되며, 물가상승이 완화되고 중앙은행 목표에 수렴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2024년 정책금리 하락 가능
- (미국) 연방기금 금리는 2023년 2분기 5.25~5.5%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며, 근원 물가상승률이 2%대로 하락함에 따라 2024년 하반기 두 차례 완만한 금리인하 전망
 - (유로지역) 기초적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유로지역의 기준금리는 2023년 3분기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며, 2024년 말까지 4.25% 유지 예상
 - (일본) 일본은행은 여전히 침체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4년 말까지 정책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기타) 캐나다와 한국은 추가 정책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호주와 영국에서는 2023년 2분기 금리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4개국 모두 2024년 하반기에 완만한 금리 인하가 예상되며, 한국을 제외한 중앙은행 채권 보유액은 더 감소할 것으로 추정

2) OECD (2022b),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2 Issue 2*, OECD Publishing, Paris.

[그림 1-13] 통화정책 전망



주: 실선은 2023년 6월 전망치, 점선은 2022년 11월 전망치를 나타냄. 패널A에는 호주, 캐나다, 체코, 덴마크, 유로지역,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이 포함.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Figure 1.27.

○ 통화 및 금융당국은 금융 불안정의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하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 정책 상충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사소통이 중요

- 감독 및 규제기관의 주요 조치에는 중소 은행의 적절한 자본 및 유동성 비율 유지, 부족분 대응 방안, 특히 부동산시장에서 신용 및 유동성 위험에 대한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등을 포함
 - 비은행 금융기관의 데이터 갭 해소와 규제 및 감독 강화 또한 필요
- 추가적 시장 긴장으로 은행 또는 비은행에 추가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제한된 시간 내에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도록 이루어져야 함
- 지불능력 문제는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가 아닌 공적자금에 대한 의존을 제한하는 국가 정리(resolution) 체계 내에서 다루어져야 함(IMF, 2023³⁾)

○ 많은 중앙은행이 보고하고 있는 상당한 재정적 손실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은 중앙은행의 신뢰 유지 및 통화정책 효과성 보장에 도움

3) IMF (2023),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pril.

- 손실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급격한 확대로 보유한 자산 가격의 하락, 급격한 정책금리 인상으로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시중은행 적립금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발생
 - 손실 규모는 향후 몇 년간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앙은행에서 정부로 이전금액을 줄이거나 중단함으로써 공공재정에 영향을 미침
- 보고된 중앙은행 손실은 가격안정 추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정책 실패의 증거가 아니며, 중앙은행은 음(-)의 자산으로도 효과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독립성 약화와 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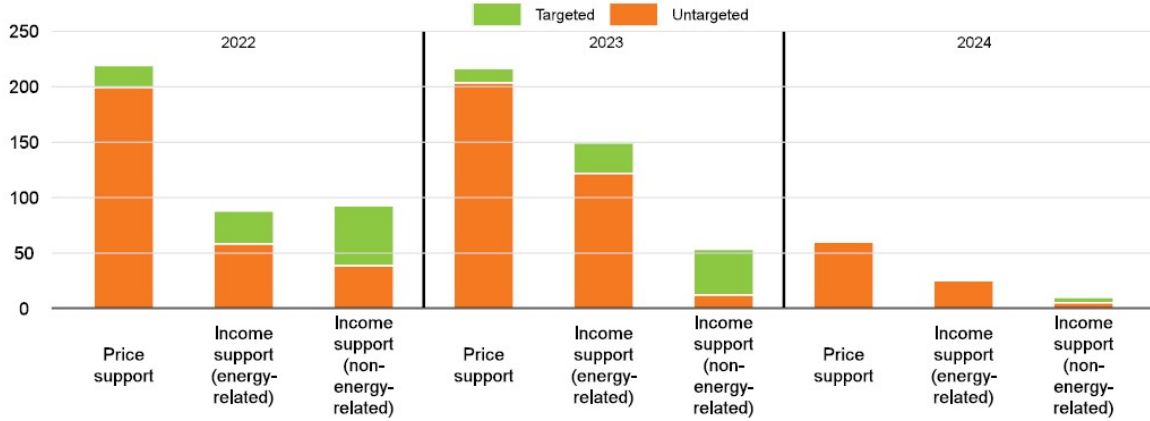
나. 선별적 재정지원 필요

- 많은 정부가 에너지 관련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시행중인 정책의 추정 예산 비용 중앙값은 GDP의 약 0.8%로 2022년과 유사한 수준(OECD, 2023a⁴⁾
 - 독일과 폴란드를 포함한 몇몇 유럽 국가는 GDP의 2% 이상
 - 궁극적인 재정 소요는 에너지 시장 가격과 에너지 소비 변화에 의존하므로, 현재 광범위하게 시행중인 가격상한 또는 VAT 인하와 같은 조치로 인해 기존 예산대비 절감 가능
 - 2023~24년에 걸쳐 에너지 지원의 점진적 중단이 예상되며, 2024년에는 재정비용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정책 계획을 둘러싼 불확실성 존재(그림 I-14) 참고)
 - 또한, 2023~24년의 물가상승률 감소는 재정수지에 부담을 줄 가능성
 - 2022년 물가상승 충격으로 인한 예상보다 높은 세수는 공공 임금 인상 및 사회복지급여(최저임금 포함)의 과거 물가상승에 대한 연동으로 이어질 가능성

4) OECD (2023a), "Aiming Better: Government Support for Households and Firms During the Energy Crisis", OECD *Economic Policy Papers*, No. 32, OECD Publishing, Paris.

[그림 1-14] 유형별 에너지 재정지원 추이

(단위: 십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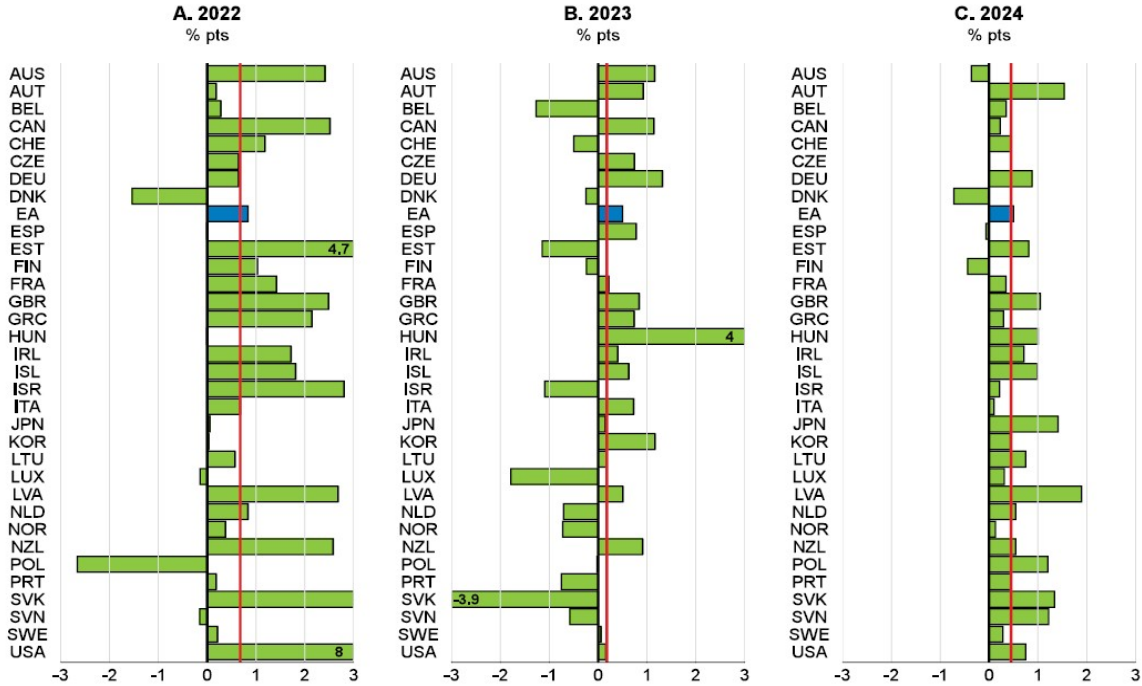


주: 41개국 중 35개국은 OECD 회원국이며(헝가리, 아이슬란드, 스위스 제외), 6개국은 비OECD 국가(브라질,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인도,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임. 지원 조치는 총계로 취해지며, 에너지 기업의 횡재세와 같은 가능한 에너지 관련 수익 증가 조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음. 정부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입법화되지 않은 경우, 시행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 1년 이상 시행된 정책의 총 재정비용은 수개월에 걸쳐 균일하게 분산되는 것으로 가정, 공식적 만료일이 없는 조치는 만료일을 가정하고 2022-2024와 관련된 총재정비용의 일부를 유지. 일본과 스페인의 경우, 당국의 연장여부 결정 또는 발표가 없었으나 일부 기존 조치가 2023년 또는 2024년까지 연장된 것으로 가정.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Figure 1.30.

- **현재까지 정부 발표 및 계획으로 평가한 재정전망은 2023~24년 많은 국가에서 완만한 재정건전화에 예상되며, OECD 회원국의 잠재 GDP 대비 구조적 기초재정수지 중앙값은 2023년 0.2%p, 2024년 0.5%p 개선될 전망(그림 1-15) 참고)**
 - (미국) 2023~24년 팬데믹 관련 지출 만료 및 에너지 관련 재정지원의 단계적 폐지로 인해 완만한 긴축 재정기조 전망
 - (유로지역) 완만한 재정건전화에 예상되며, 이는 2023년 팬데믹 지원 종료 및 2024년 에너지 관련 지원 단계적 폐지에 주로 기인
 - 일부 국가에서는 차세대 EU 계획의 조기 시행, 국방·보건 또는 물가연동 복지급여 지출 증가로 구조적 기초재정수지 개선을 일부 제한
 - (일본) 2023년 재정기조는 팬데믹 관련 조치의 단계적 만료가 에너지·식품 가격 상승에 대한 취약 가구 지원 및 국방비 지출 증가로 상쇄돼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에는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을 위한 조치의 점진적 감소가 제한적 재정기조로 이어짐에 따라 구조적 기초재정수지의 상당한 개선이 전망
 - (기타) 영국은 제한적 재정기조로 2023~24년 동안 잠재 GDP 약 2% 수준의 구조적 기초재정수지 누적 증가가 전망되며, 호주, 캐나다, 한국의 긴축 정도는 영국보다 제한될 전망
 - 헝가리는 2023~24년 동안 5%의 재정건전화를 계획하고 있는 반면,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2023년 대규모 재량지출 확대 전망

[그림 1-15] 2022~24년 잠재 GDP 대비 구조적 기초재정수지 변화분



주: 빨간 수직선은 OECD 선진국의 중앙값을 나타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Figure 1.31.

○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은 정점이었던 2022년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광범위한 지원 정책 종료와 별도로 취약 가구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지속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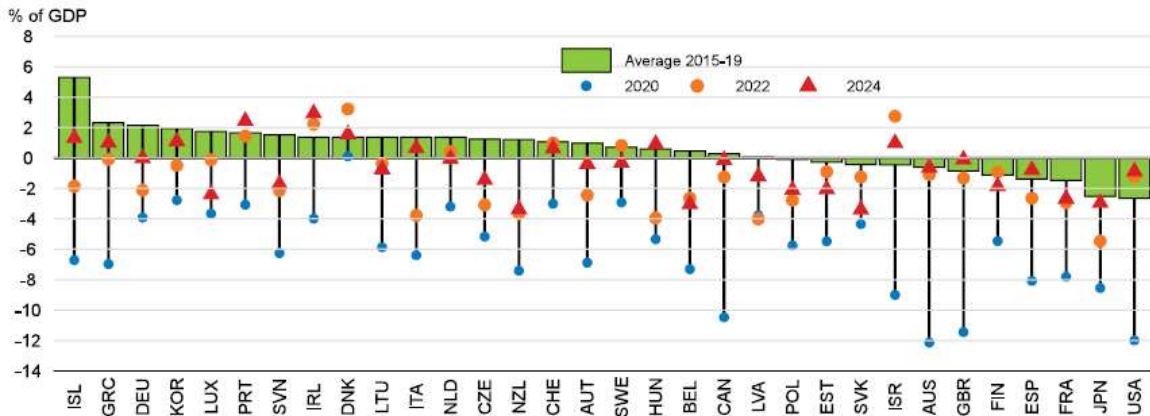
- 과거 물가상승에 대한 재량적 보상 또는 자동 연동으로 최저임금 및 복지급여를 증가시키는 것은 에너지의 한계가격을 낮추지 않고 에너지 절약 유인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효과적 메커니즘
- 에너지 가격 하락을 위한 비선별적 조치는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공공재정 부담, 저소득 가구 지원 중복, 높은 물가상승 시기에 총수요 증가 유발로 물가상승률을 목표치로 되돌리려는 통화정책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높은 기초적 물가상승 위험을 증가시킴
- 또한 소득 이외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취약성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지표 결합, 데이터 수집을 위한 광범위한 디지털 도구 사용 등 표준 복지체계를 뛰어넘는 개선된 선별적 조치가 필요
 - 에너지 가격 취약성은 소득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효율적 주택, 연령·질병 또는 지리적 요인에도 의존하기 때문에 소득에 기반한 기존의 복지체계를 통한 지원은 불충분

- 복지체계가 약한 국가의 경우, 에너지 사용자에게 대한 보다 광범위한 지원정책이 오래 필요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보다 선별적이고, 에너지 효율을 장려하고, 높은 에너지 비용에 대한 조정 촉진이 필요
- **미래 에너지 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공공 건물 에너지 효율성,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에너지 그리드, 공공 R&D 등을 포함한 상당한 정부 투자 증가가 필요**
 - 2023~24년 GDP 대비 공공투자는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공공투자가 낮았던 국가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 이상으로 증가 예상
 - 그럼에도 2023~24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공공투자 기여도는 OECD 선진국 중앙값이 연평균 GDP의 0.1%p로 완만할 전망
 - 유럽의 공공투자 증가는 차세대 EU 투자 계획(European Commission, 2022⁵⁾) 시행이 가속화될 것을 크게 반영
- **장기적으로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재정 프레임워크는 부채비율의 점진적 감소에 필요한 공공재정의 중기 경로에 대해 국민과 시장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도움**
 - 2023~24년 기간 동안 OECD 선진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 중앙값은 이전 수준을 유지하여 2024년에는 2019년 보다 7%p 높을 것으로 전망
 - 향후 2년간 재정건전화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초재정수지는 팬데믹 이전 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OECD 선진국의 중앙값 기준 GDP의 1.3%p 격차)(그림 I-16) 참고)되며, 향후 수십 년 동안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큰 압박이 예상
 - 연금 및 보건, 장기요양에 대한 정부지출은 정책 개혁이 없을 경우 2060년 GDP의 약 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Guillemette and Château, 2023⁶⁾)

5) European Commission (2022),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22*, November.

6) Guillemette, Y. and J. Château (2023), "Long-term Scenarios Update: Incorporating the Energy Transition", *OECD Economic Policy Paper*, forthcoming.

[그림 I-16] 기초재정수지 변화 추이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Figure 1.33.

- 부채상환비용 상승과 더불어 2024년까지 이자 지급액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저수의 채권의 만기 도래에 따라 추가 비용 상승 전망

- 2024년 대부분 국가에서 신규 국채 차입비용이 기존 공공부채의 평균 비용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

다. 신흥국의 경우,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이 중심이 돼야하고 재정여력을 재구축할 필요

- 신흥국의 통화정책은 지속적 물가상승 압력과 선진국의 긴축 정책을 반영하여 제한적

- 실질 정책금리는 이제 대부분 국가에서 양(+)이며, 이로 인해 투자 및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

- 정책여력은 물가상승 기대치를 고정시킬 필요성과 긴축적 세계 금융여건으로 인해 여전히 제한적

-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의 완화로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정책금리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헤드라인 및 근원 물가상승률을 모두 상회할 것으로 예상(그림 I-17), 패널A)되나, 기초적 물가상승률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

- 2024년에는 헤드라인 및 기초적 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 목표범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가상승 기대가 유지될 경우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도 존재

- 그러나 생계비 위기 영향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기조적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국가는 높은 정책금리 유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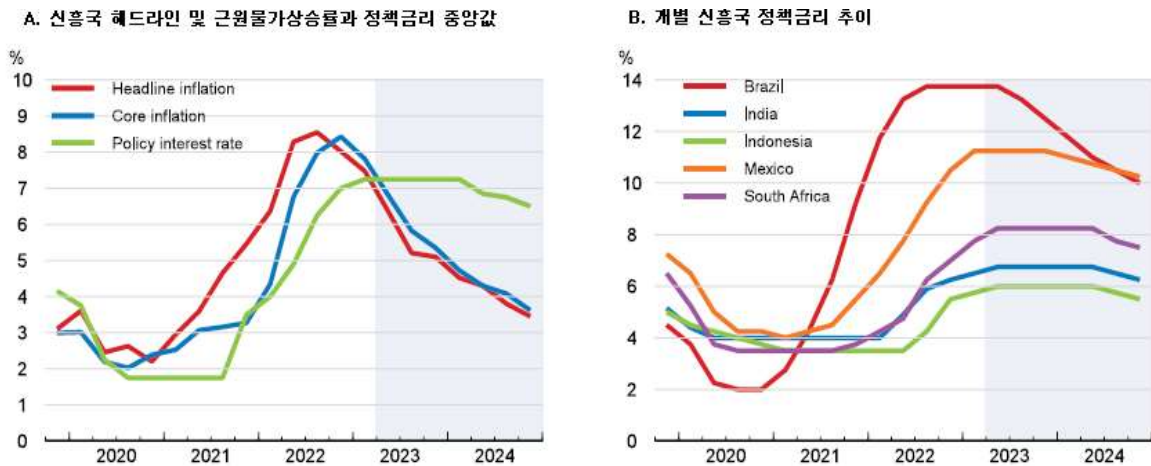
○ 최근 세계 위험회피 증가 및 미국달러 평가절상 위험 상황에서 상당한 외화부채가 있는 국가는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신중한 고려 필요

- 새로운 환율압박이 발생하더라도 각국은 자국통화가 근본적인 경제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함
- 다만, 국내 금융안정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일시적 외환 개입 또는 자본 흐름 제한을 고려할 필요

○ 라틴아메리카의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에서는 지속적인 기조 물가상승 역학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2024년 이전에 정책금리 인하가 예상되지 않음([그림 1-17], 패널B)

- 반면, 브라질의 정책금리는 2023년에 하락을 시작할 전망이며,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4년까지 정책금리 하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그림 1-17] 신흥국 물가상승률 및 정책금리 전망



주: 패널A에서 전년 대비 헤드라인 물가상승률 및 정책금리는 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페루,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포함. 전년 대비 근원물가상승률은 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페루,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포함.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Figure 1.35.

○ 대부분의 신흥국 공공부채는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많은 신흥국에서 2022년 재정적자는 물가상승 및 원자재 수출국의 원자재 관련 재정수입 증가로 감소했으나 2023~24년 재정수지 변화는 국가별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

- 원자재 수출국은 더 나은 거시경제 안정화 및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공공부채 감소를 위해 신뢰성 있는 재정준칙 설립 및 복원, 공공재정의 원자재 주기와 분리 필요
 - 일부 원자재 수출국은 우발적 수입을 에너지 관련 재정지원에 사용했으며, 원자재 가격 하락은 재정적자 증가로 이어질 위험
 - 예) 브라질의 지출한도에서 사회지출 제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성장 약화는 2023년 예산 적자 증가로 이어질 전망
- 인도는 납세순응 강화, 보조금 감소 및 국유기업 민영화 등으로 재정상태가 개선될 전망이며, 세수확충 강화, 공공재정 관리 개선, 지출 효율화 조치와 결합될 필요
- 인도네시아는 재정준칙 복원으로 재정수지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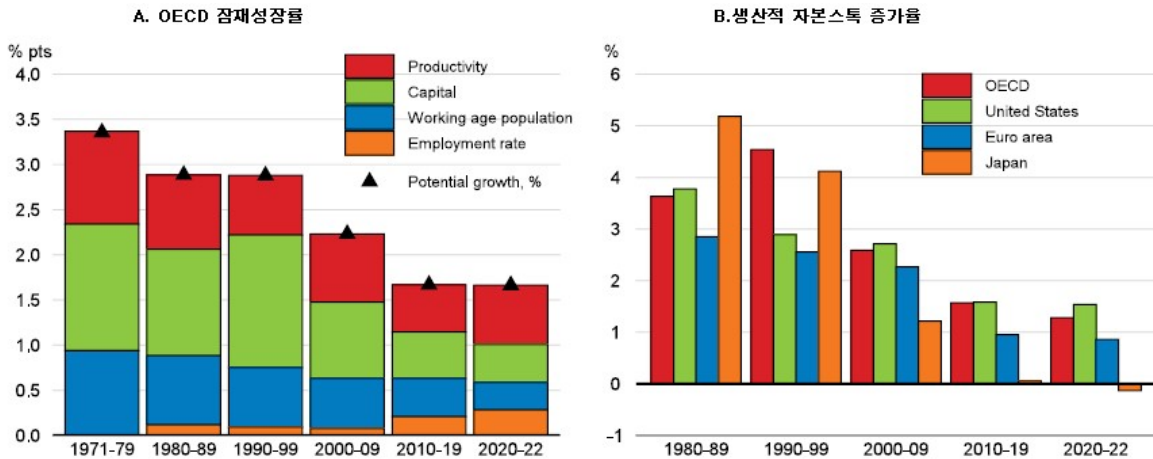
라. 성장 촉진, 회복력 강화, 형평성 개선을 위해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노력 필요

○ 많은 국가들은 근본적 추세 성장 강화 및 성장 질 개선의 이중 과제에 직면

- 팬데믹과 에너지 가격 충격의 완화는 위와 같은 장기적 과제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강력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 올해 많은 국가들이 경험하는 저성장은 역동성이 악화되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 금융위기 이후 추세 성장은 선진국 및 신흥국 모두에서 이전보다 크게 악화([그림 I-18] 패널A)
 - 주요 요인은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 감소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연령 인구의 증가속도 둔화이며,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감소는 노동자 1인당 자본의 소폭 증가와 총요소생산성 둔화를 모두 반영
 - OECD 국가의 생산적 자본 투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보다 2010년 이후 훨씬 악화([그림 I-18] 패널B)되었으며, 총요소생산성 또한 최근 몇 년간 더 느리게 성장

- 이러한 장기간의 둔화는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지리경제적 분절화 및 빈번히 발생하는 극단적 기상현상과 같이 상호작용하는 부정적인 공급 충격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급을 촉진하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

[그림 1-18] 성장 및 투자 증가율 둔화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Figure 1.37.

- 정책입안자는 국가별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에 따라 낮은 투자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핵심 범분야 요소로 기업이 투자를 수행하고 효율성을 개선할 유인을 갖도록 경쟁 강화 필요
 - 산업집중도와 마크업 증가, 기업 진입률 및 퇴출률 하락, 최상위 기업과 다른 기업 간 격차 확대 등 최근 기업 경쟁 약화의 증거 다수 발견
- 경쟁 압력 및 투자 유인 강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는 인허가 간소화를 포함한 부문별, 경제 전반에 걸친 규제 개혁을 포함
 - 다른 우선순위로는 세제 개혁, 직접세에서 간접세로의 전환, 과세 기반 확대, 물리적 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 있음
 - 채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파산 제도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을 촉진하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위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긍정적 효과
 - 신흥국의 경우, 무역 및 투자 장벽 완화, 규제 영향평가 확대, 법치 강화 등 진입 비용 감소 조치를 통해 비즈니스 역동성 및 지식 확산 촉진이 가장 중요

- **신규 투자 및 기술의 최대 활용을 위해서는 기술 및 관리 능력에 대한 보완 투자가 필요**
 - 공공정책은 훈련 촉진, 근로자와 일자리의 생산적 연결을 통해 인적 자본의 질과 양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
 - 노동시장 규제는 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 직업의 면허요건에 불필요한 차이를 제한하면 관련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가 적합한 직업을 찾는 데 도움

- **현재 일부 OECD 국가의 장기간 노동시장 긴축(특히, 제조업 및 저임금 부문)은 성장을 강화하고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
 - 약한 총고용률은 청년, 고령, 여성, 소수자 및 저숙련 근로자와 같은 특정 집단의 낮은 고용으로 발생

- **양성평등에 대한 투자는 경제활동 참여, 고용 및 산출량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광범위한 정책 전반의 조치가 필요**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성별 고용 및 임금격차 감소 속도가 둔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정책 조치가 필요
 - 보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많은 OECD 국가들의 정책 우선순위
 - 어머니의 고용, 특히 전일제 근무에 대한 장애물은 저비용 양질의 보육의 부족이며, 육아비용이 고용진입에 재정적 걸림돌로 작용
 - 또한 양육 부담 육아휴직에 대한 유인 제공, 복귀 후 기술 향상 제도, 기업 내 양성평등 장려, 외국 태생 여성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여성을 위한 기업가 정신 및 금융포용 촉진, 부 소득자에 대한 과세 평준화 등 여성의 고용 및 경력 기회 강화를 위한 정책 필요

마. 기후정책

- **2015년 파리협정으로 205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이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C 미만, 가능한 1.5°C로 제한하기 위한 목표가 설정되었으나, 넷제로 목표 달성 가능 여부는 미지수**

- 세계적 수준에서 시행중인 정책은 2030년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에는 불충분하여(IEA, 2022⁷⁾), 세기 중반까지 넷제로 배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
-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집약적에서 친환경적으로의 경제구조 변화와 노동자 및 자본의 실질적 재배치 필요**
 - 또한 전환에는 녹색 투자 대폭 증가, 탄소가격 사용 확대, 배출감소를 가능케 할 규제, 제도, 표준 강화 필요
 - 잘 겨냥된 규정은 특히 주택 및 사무실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채택을 장려하며, 정책의 명확한 전달과 안정성 또한 중요
 - 기업이 미래 정책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할 경우 장기적인 청정에너지에 필요한 만큼의 투자 증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Berestycki et al., 2022⁸⁾)
- **에너지 전환의 또 다른 주요 과제는 관련된 분배영향에 대한 관리**
 - 주요 전환비용은 광업, 화석연료, 에너지 집약산업과 같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특정 부문에서 발생 또는 증가하며, 이런 산업에 의존하는 기업에도 영향
 - 성장하는 녹색활동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을 위험
 - 전환의 악영향으로부터 취약한 사회집단을 보호하는 것은 기후변화 완화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향상시키며, 모든 개혁패키지에 세입 재할용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
 - 기존 세금을 줄이거나 취약 가구에 이전을 위해 새로운 세입을 활용
- **식량 및 에너지 불안정 극복, 저소득 국가의 부채 지속가능성 보장과 더불어 국가들의 탄소 완화 노력의 조정을 개선하기 위해 강화된 국제협력이 필요**
 - OECD 회원국 공동의 넷제로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새로운 OECD 포럼인 IFCMA⁹⁾ 출범

7) IEA (2022), *World Energy Outlook 2022*, International Energy Agency, Paris.

8) Berestycki, C., et al. (2022), "Measuring and Assessing the Effects of Climate Policy Uncertaint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724, OECD Publishing, Paris

9) the 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es

- 데이터 공유, 상호 학습 및 대화를 통해 국제 협력 개선을 목표로 하는 IFCMA는 첫 번째 조치로 포럼 회원국이 사용 중인 정책수단을 검토하고 배출량 감소효과를 측정
- IFCMA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향상된 투명성 체계¹⁰⁾를 포함한 기후 정책 데이터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보완

바. 시장 개방 및 회복력이 높은 공급망은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

○ 회복력이 높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갖춘 개방적이고 잘 작동하는 국제 시장은 선진국 및 신흥국 모두의 장기 번영과 생산성 증가의 중요한 원천

- 경제가 재개됨에 따라 전염병과 회복 초기 단계는 국제 무역의 이점뿐만 아니라 원거리 공급자와의 점점 복잡해지는 공급망으로 인한 취약성과 경제 안보 개선을 위한 시도로 인해 직면한 도전 또한 강조
 -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역과 공급 안보에 대한 긴장을 더욱 증폭시켰으며 가치사슬 분절화의 위험이 심화

○ 특히 아시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대규모 신흥국의 세계 시장으로의 통합은 세계 공급 확대, 경제 효율성 향상, 선진국 물가안정 유지에 도움

- 분열이 발생하고 경제 정책이 더 국내지향적이 되면 이런 이득이 사라지고, 저소득 가구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됨(Arriola et al., 2020¹¹⁾; Aiyar et al, 2023¹²⁾)
- 시행중인 세계 수입제한의 누적 규모는 이미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액과 세계 수입 비중 모두에서 꾸준히 증가
 - 2022년까지 세계 상품 수입의 9% 이상이 수입 제한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2017년 약 4%에서 증가
 -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부문수준의 양자 간 무역에 현저한 변화가 있었으나 무역의 전반적

10) Enhanced Transparency Framework

11) Arriola, C., S. Guilloux-Nefussi, S. Koh, P. Kowalski, E. Rusticelli and F. Van Tongeren (2020), "Efficiency and Risks in Global Value Chains in the context of COVID-19",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637, OECD Publishing, Paris.

12) Aiyar, S. et al. (2023), "Goeconomic Fragmentation and the Future of Multilateralism", *IMF Staff Discussion Note*, No. SDN (2023)/001.

강도보다는 주요 경제의 무역 패턴에 주로 영향을 미침

- 그러나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은 최근 증가했으며, 지속된다면 무역성장을 저해할 우려
- 다자간 기반 규칙에서 더 멀어지면 향후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가중
- 지역 또는 양자 간 무역 협정 강조는 잠재적으로 중소기업에 배제하여 무역에서 얻는 이익 제한 가능

○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세계 가치사슬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정책과제

- 회복력 개선을 위한 대부분의 조치는 비용이 많이 드는 생산 중단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유인을 가진 민간 기업에 있음
- 그럼에도 정부는 무역 및 투자 장벽 제거, 무역 촉진 강화, 디지털 및 물리적 인프라 현대화, 기술표준의 이질성 축소를 통해 유리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의 병목현상 최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이는 충격을 완화하고 공급자 간의 대체를 용이하게 함

II 경제성장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추진

1. 서론

- **코로나19 대유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현재의 생계비 위기는 여성의 소득과 일자리 기회 및 안정성에 영향을 미침**
 -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 및 인구 고령화와 같은 다년간의 요인은 성별 격차를 확대시키는 위험성을 지님
 - 여성은 경제적 충격에 더 취약하고, 남성보다 과학적 지식을 덜 전문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녹색 성장과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기회를 발견하기에 불리할 수 있으며, 나이든 친척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돌봄을 부담하고 있음
 - 본 장은 성 평등에 대한 OECD의 이전 연구를 활용하여 OECD 국가들의 고용 및 임금의 성별 격차, 그리고 최근의 진전과 근본적인 요인들을 작성함
 - 이후, 성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정책을 검토하고 추가 해결책을 정리함
- **고용과 임금의 성별 격차는 지난 10년 동안 비교적 완만하게 좁혀졌으나, 여전히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정책 조치가 필요함**
 -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주요 부문은 다음과 같음
 - 보육의 질과 유아 교육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더욱 합리적인 비용을 형성
 - 부모 간 육아 휴직의 더욱 공평한 사용을 촉진하고, 교육을 통한 직장 복귀 촉진
 - 기업의 성별관련 정보공개를 통한 양성 친화적 승진 지원
 - 관리직과 창업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증진
 - 세금과 연금 시스템의 편견 해소
 - 맞춤형 노동 시장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 출신 여성을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
 - 여성의 포용금융(Financial inclusion) 향상

- 정책 분야에서의 성 주류화(Mainstreaming gender)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성 격차 지수로 측정된 낮은 성 불평등은 일반적으로 1인당 소득 증가와 관련이 있음([그림 11-1] 참고)

■ 더 높은 성 평등과 더 높은 소득 사이의 인과관계는 양방향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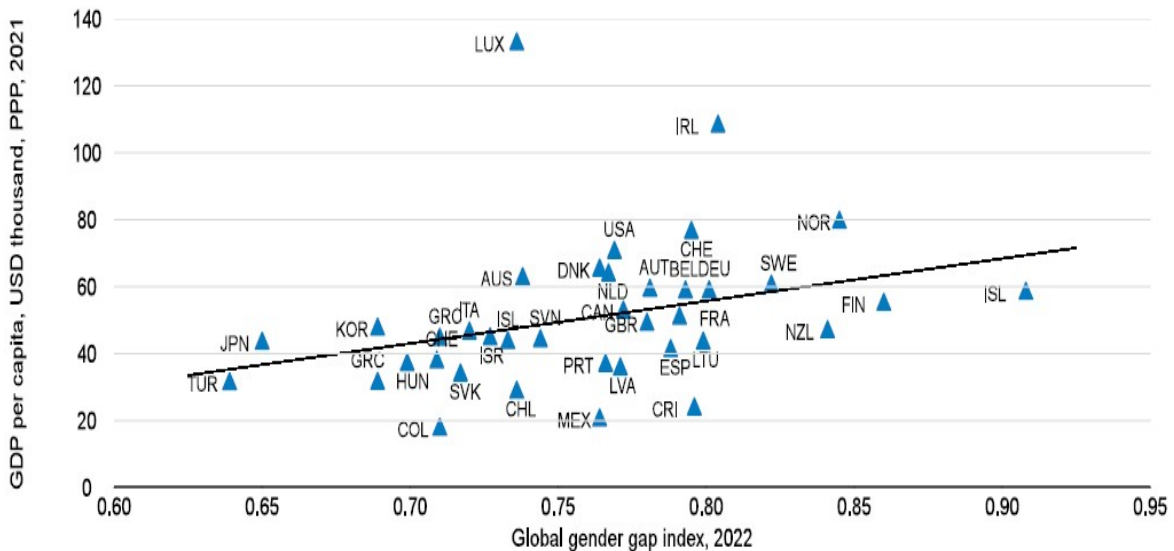
○ 높은 소득과 생활수준은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

■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데 핵심적인 재정적 포용뿐만 아니라 건강과 교육에 대한 더 나은 접근을 포함함

■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은 일반적으로 개인(특히 여성)의 더 많은 경제적·정치적 권리 및 기회와 연관이 있음

[그림 11-1] 양성평등과 1인당 소득의 관계

(단위: 1천 달러)



주: 세로축은 2021년의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PPP)을 나타내며, 가로축은 성 격차 지수를 나타냄. 성 격차 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성별 격차가 낮다는 것을 의미함. 성 격차 지수는 세계경제포럼(WEF)가 성 평등 증진을 기준으로 네 가지 관점(경제적 기회, 교육, 건강, 정치적 리더십)에서 국가의 성별 격차 비교를 목적으로 만들어짐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3 June, Figure 2.1

○ **한편 양성평등은 주로 교육, 건강, 노동 참여 및 일자리 질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더 높은 사회후생에 기여함**

- 남성과 여성 사이의 보다 평등한 기회는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포괄성을 향상시키며, 인재 활용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 거시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미국을 기준으로 한 성장 모델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50% 증가하면 균제상태에서 최종적으로 1인당 소득이 35% 감소하게 됨
- 또한, 성 불평등은 일부 다른 나라와 미국과의 소득 격차에 대한 많은 부분을 설명함
- 다른 연구는 OECD에서 성별 격차가 평균 15% 소득 손실을 유발하며, 이 중 40%는 창업 격차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
- OECD 국가 전체에서 노동참여와 근로 시간의 성별 격차를 좁히면 2060년까지 GDP를 9% 이상 끌어올릴 수 있으며, 평균 연간 성장률이 약 0.25%p 높아질 수 있음

○ **기업 차원에서의 성별 다양성의 차이가 기업 생산성 격차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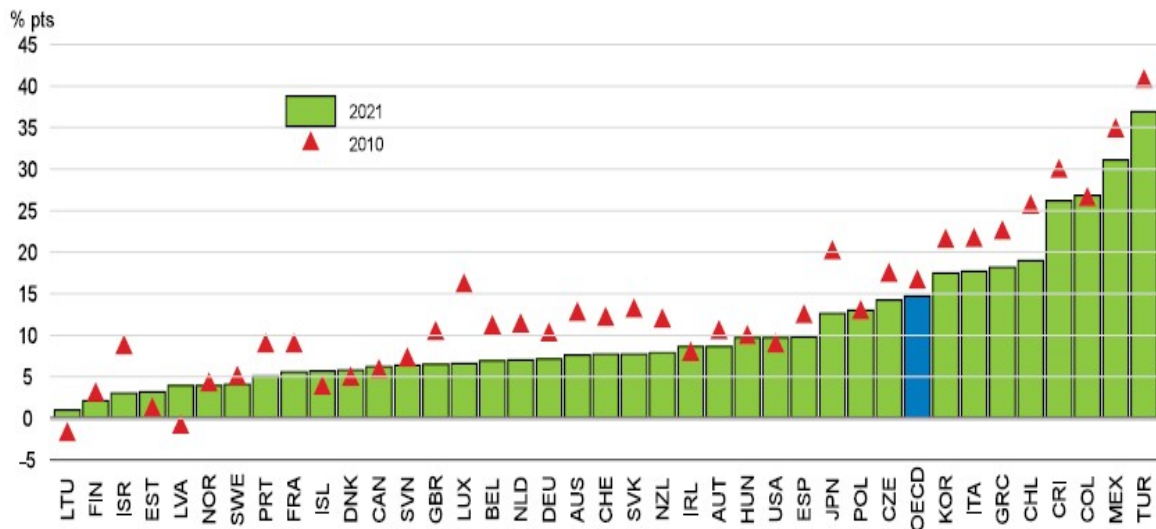
- 기회와 사회이동의 향상된 평등은 더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 부모 또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자녀의 교육 및 임금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여성에게 더 나은 기회는 세대 간 사회적 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이는 OECD 국가에서 소득이 하위 십분위인 어린이가 평균 소득 수준에 도달하는 데 약 4~5세대가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 또한, 성별 다양성은 경제가 충격으로부터 더 빨리 회복하고, 경제적·재정적 회복력을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공공정책은 보다 포괄적인 결과를 지원하는 역할을 함

2.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뒤쳐져 있는 여성 고용

- 성별 고용 격차는 201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좁혀졌지만 모든 OECD 국가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성별 고용 격차는 2021년 리투아니아의 1%p에서 튀르키예의 37%p까지 국가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그림 II-2] 참고)
 - 라틴아메리카, 남유럽, 아시아에서는 고용 격차가 더 큰 경향이 있으며, 동유럽과 북유럽에서는 작은 경향이 있음
 - 이러한 격차는 문화적·사회적 규범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의 결과임
 - 하지만 일정 부분 정책적 요인과 관련된 평등한 기회의 부족 현상은 여성의 낮은 고용률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

[그림 II-2] 국가별 성별 고용 격차

(단위: %p)



주: 2010년과 2021년의 15~64세 사이 남녀 고용률 차이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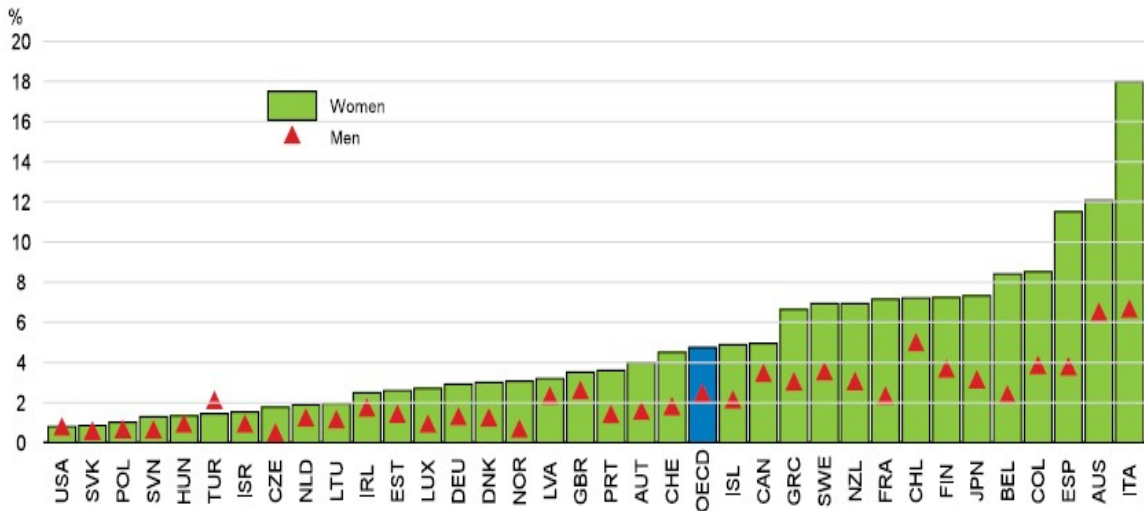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3 June*, Figure 2.2

○ 시간제 근로(part-time job)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음

- 평균적으로 OECD에서 여성 네 명 중 한 명이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음
- 대부분의 동유럽에서는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율이 더 낮고,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은 더 높은 편임
- 시간제 근로는 일-생활 균형을 고려한 결과일 수도 있음
- 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는 남성보다 여성 채용에서의 비중이 더 큼([그림 II-3] 참고)
 -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여성의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가 10%를 초과함
 -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은 여성을 근로 시간 감축에 더욱 취약하게 함

[그림 II-3] 국가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의 성별 격차

(단위: %p)



주: 2021년 또는 최근 고용에서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 비율의 성별 격차를 나타냄. 시간제 근로는 보통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고용인(종업원 또는 자영업자)으로 정의됨. 취업자는 만 15세 이상으로 전주에 1시간 이상 근로소득이 있다고 신고하거나, 기준 주에 공식적인 직무애착(job attachment)이 있는 상태에서 결근한 자를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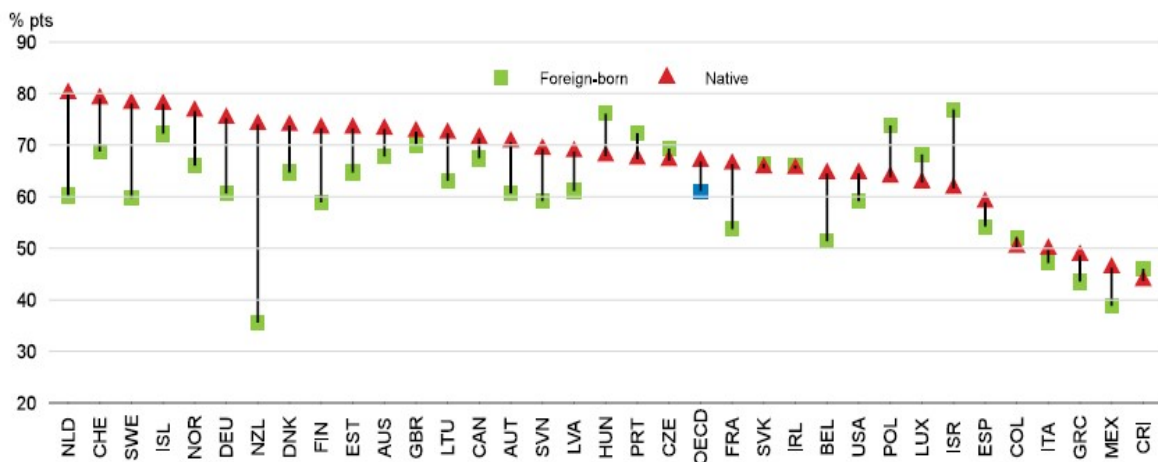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3 June, Figure 2.3

○ 일부 국가에서는 이민자의 고용이 특히 낮음([그림 11-4] 참고)

- 토착민들과의 성별 고용 격차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국가 간 이민자들의 기술 차이를 반영함
-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갖춘 국가에서 이민자들의 낮은 교육 수준과 외국인 자격 취득의 어려움은 취업에 방해요인이 됨

[그림 11-4] 외국 태생 여성과 내국인의 고용률 격차

(단위: %p)



주: 2021년 이후 15~64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함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3 June*, Figure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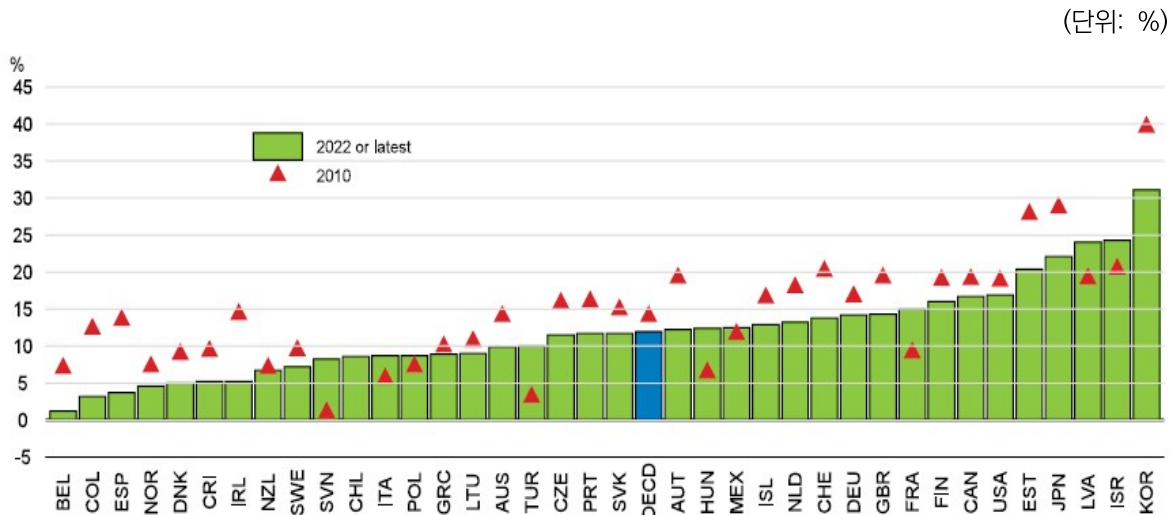
○ 가족 관련 업무의 불평등한 부담은 여성이 남성보다 일을 그만두는 비중이 더 높은 원인이 됨

- 평균적으로 유럽 국가에서 여성의 경우, 취업자의 약 1.7%와 실업자의 약 4.6%가 가사 일을 하기 위해 경제 비활동 상태가 됨
- 반면 남성은 취업자의 0.2%와 실업자의 1%가 경제 비활동 상태가 됨
- 장시간 무급 노동은 비교적 유급 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남성에게 비해 여성의 복지를 불균형적으로 감소시킴
-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직업 목표와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재평가의 계기가 되어 가사를 보다 분담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음

3. 성별 임금 격차와 유리 천장의 지속

- 2010년 이후 OECD 10개국 중 7개국의 비율로 성별 임금 격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폭으로 나타남([그림 11-5] 참고)
 - 평균적으로 2022년 OECD의 성별 임금 격차는 약 12%였으나 국가 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남
 - 벨기에는 임금 격차가 1% 안팎이었지만, 한국은 지난 10년간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30%가 넘음
 - 임금 격차의 일부는 나이, 교육, 직업, 고용 분야 및 근무 시간과 같은 요인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반영할 수도 있음

[그림 11-5] 성별 임금 격차



주: 성별 임금 격차는 남성의 중위 소득 대비 남성과 여성의 중위 소득의 차이로 정의함. 위 데이터는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함.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3 June, Figure 2.5

- **기술 및 직업 경험과 무관한 요소들이 성별 임금 격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
 - 성별 임금 격차의 약 3/4은 비슷한 기술을 가진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주로 업무와 책임 할당의 차이 때문임
 - 나머지 1/4는 여성이 저임금 기업과 산업에 집중된 데에서 비롯됨
 -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임금차이에 대한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의 상대적 영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시정 조치를 방해함

- **유럽 2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규범·성 고정관념·차별과 관련된 요소들이 평균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의 40%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의 경력과 임금 상승을 방해하는 모성 벌칙(motherhood penalty)이 60%를 차지함**
 - 사회규범, 성 고정관념, 차별과 관련된 요인들은 북유럽 및 서유럽 국가에서 우세하며, 모성 처벌 요인은 대부분의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에서 우세함
 - 이는 국가 별 특정 과제에 맞춘 정책 조치의 필요성을 나타냄

- **임금 격차와 고용 격차는 연금 격차로 이어지는데, 이는 경력 단절이 여성의 연금 납입금을 낮추기 때문**
 - 또한 여성의 기대 수명이 길면 연금의 실질 가치가 약화될 수 있음
 - OECD 24개국의 65세 이상 여성에 대한 연금 지급액은 남성에 비해 평균 약 25% 정도 낮으며, 연금 격차는 에스토니아의 3%에서 일본의 47%까지 국가별로 매우 다양함

- **OECD 국가에서 여학생들의 교육 성과는 일반적으로 남학생들보다 더 좋으나, 고소득 직업으로 이어지는 분야에서는 여학생들의 참여율이 낮음([그림 II-6] 참고)**
 - 평균적으로 25~34세 여성의 54%가 2021년에 고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반면, 같은 연령대의 남성은 41%에 불과함
 - 그러나 보통 높은 보상의 직업으로 이어지는 과학, ICT, 엔지니어링과 같은 분야에서 여학생들은 낮은 참여율을 보임 ([그림 II-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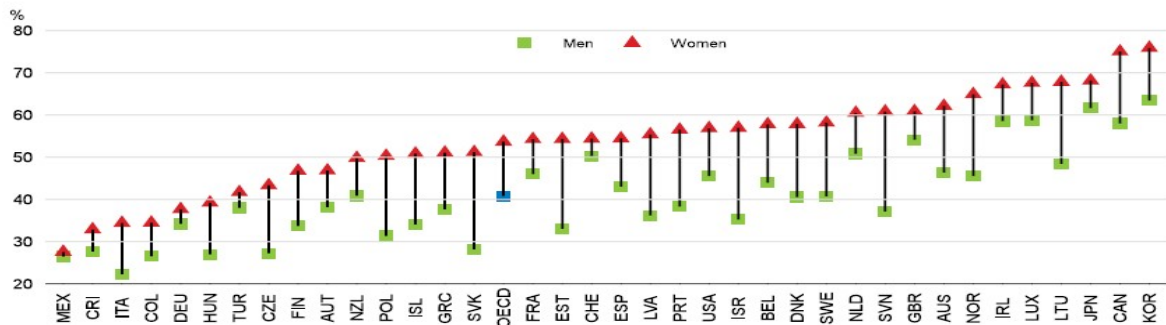
- 그리스에서는 고등학교 남성 졸업생의 약 40%가 과학, ICT, 엔지니어링 분야를 졸업하는데, 이는 여성 졸업생의 20% 미만이 과학, ICT, 엔지니어링 분야를 졸업하는 것과 대조됨
- 이것은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으나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음

○ 문화적 규범의 구체적 영향은 평가하기 어렵지만, 여학생들(특히 높은 성취를 가진 여학생)은 수학 성적이 낮은 경향이 있음

-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수학 또는 과학 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낮기 때문임
- 또한, 수학에 대한 강한 불안감을 표현할 가능성이 더 높음

[그림 II-6] 여성과 남성의 고등교육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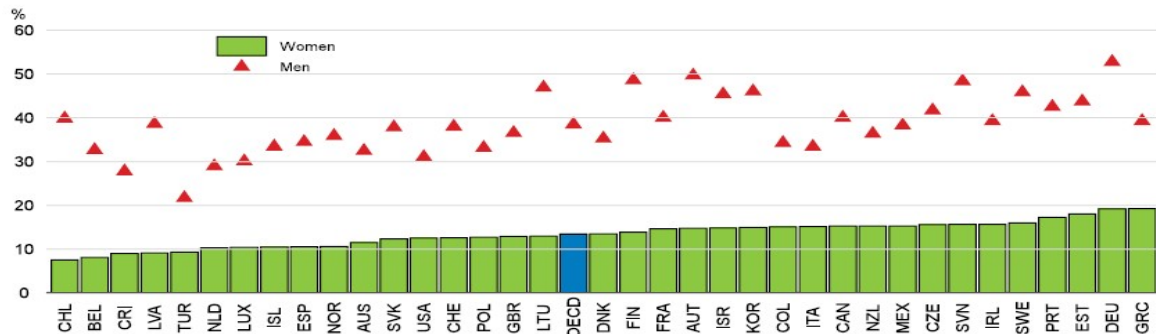


주: 25~34세 인구 중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을 나타냄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3 June, Figure 2.6

[그림 II-7] 남성과 여성의 과학, ICT, 엔지니어링 분야 졸업 비율 차이

(단위: %)



주: 자연과학, 수학, 통계, ICT, 공학을 포함함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3 June, Figure 2.7

-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 부족은 흔히 여학생들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직면하는 성 고정관념에 의해 악화됨
 -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성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는데, 부모, 학교, 교사 및 친구는 학생들이 성 정체성을 내재화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침
 - 이는 여자아이들이 간호사나 교사가 되기 위한 진로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반면, 남자아이들은 과학, 공학 또는 사업과 관련된 목표를 추구하고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음

- 비록 여성은 녹색 전환으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로부터 영향을 덜 받지만, 녹색 전환에 의해 제공되는 기회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지 또한 약할 수 있음
 - OECD 국가에서 여성은 녹색 일자리의 1/3미만(28%)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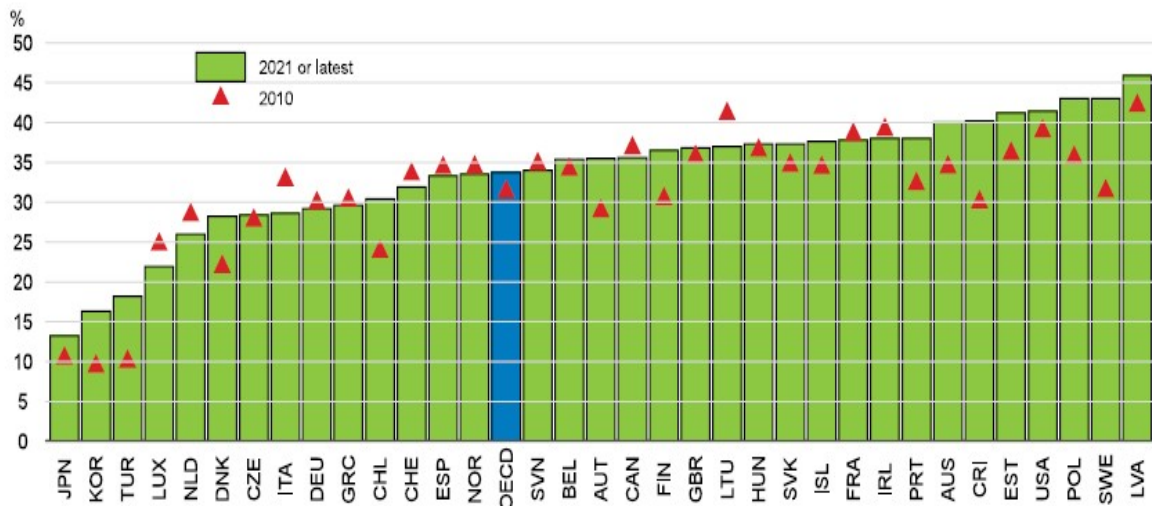
- 여성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저임금 활동(특히 공공부문)에 많이 참여함
 - 남성 비율이 높은 직업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업이 임금이 더 낮은 경향이 있음
 - 남성 비율이 높은 분야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 일부 분야(특히 서비스직)에서 낮은 임금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유럽과 미국의 증거들은 여성 비율이 높은 직업의 낮은 임금은 여성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저평가에서 비롯될 수도 있음을 시사함
 - 여성 비율이 높은 직업의 낮은 임금이 해당 직업들을 남성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으로 만든다면, 성별 불균형은 영구화 될 수 있음

- 여성들은 여전히 유리 천장을 마주하고 있음
 - OECD 상장사 이사회의 여성 평균 비율은 최근 몇 년간 대부분 국가에서 증가했음에도 2021년 그 비율은 28%에 불과함
 - 아이슬란드와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OECD 상장사 이사회의 성별 비율이 거의 동등하지만, 에스토니아, 헝가리, 한국에서는 여성 점유율이 10% 미만임
 - 또한, 이사회 내의 임원 중 여성은 거의 없으며, 여성은 평균적으로 관리직의 3분의 1 미만을 차지함(그림 II-8] 참고)

- 고위 경영진의 여성 대표성이 떨어지는 점은 형평성의 관점 뿐만 아니라, 임원직에 있는 여성들이 이사일 때보다 회사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
- 경영진(특히 고위직)에서 성별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회사 이사회의 성별 균형을 달성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많은 관리자들이 내부적으로 승진하고, 내부 및 외부 승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경험과 직원들의 동기부여 유지를 위해 종종 필요함

[그림 II-8] 관리직의 여성 비율

(단위: %)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3 June*, Figure 2.8

○ 기업 내 성 평등의 느린 진보는 성별, 민족성, 문화 측면에서 더 큰 다양성이 회사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증거에 반하고 있음

-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좀 더 다양성을 지닌 그룹이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더욱 뛰어남
-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집단 지능은 집단 내 여성 비율에 따라 증가함
- 동질적인 집단은 편협함, 집단 사고¹³⁾, 그리고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반면, 다양성을 지닌 집단은 향상된 정보 처리와 복잡한 사고를 통해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
- 성 다양성은 집단 의사결정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더 많은 인재 풀에 대한 접근, 더 넓은 범위의 경영 기술, 고객 선호도에 대한 더 나은 이해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제공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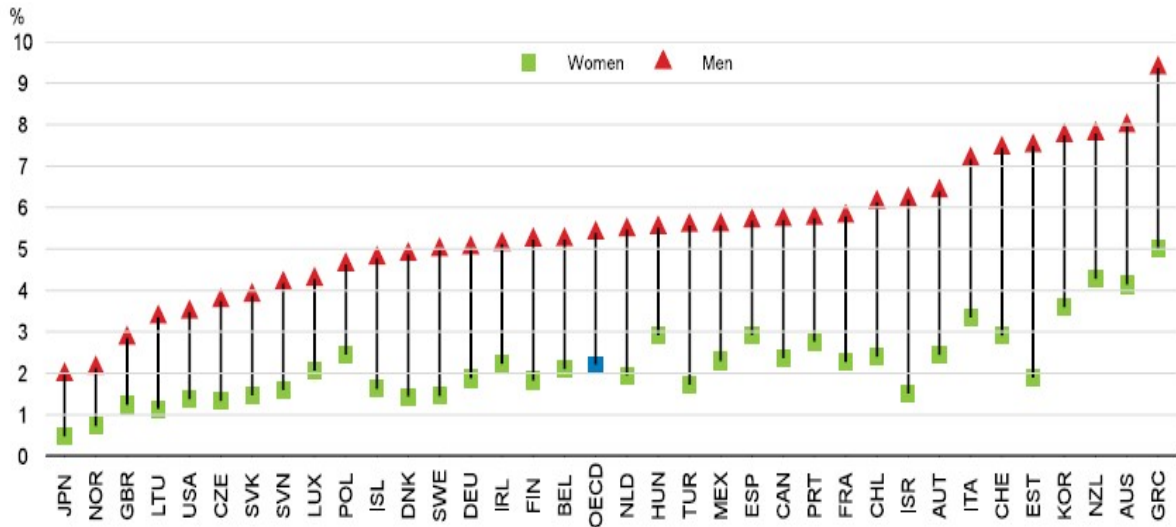
○ 여성이 남성보다 기업가가 될 가능성은 낮음

- 고용주인 사업가 여성은 OECD 전체 취업 여성의 평균 2%를 약간 상회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 약 5.5%의 수치를 보임([그림 II-9] 참고)
-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모든 OECD 국가에서 큼
- 또한, OECD 국가의 여성은 남성보다 창업을 할 가능성이 1.5배 낮음
 - 이러한 격차는 국가마다 큰 차이가 있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창업에 더 적극적인 국가는 없음
- 여성은 남성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함
 - 여성이 운영하는 사업은 수출되거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도입 가능성이 낮고, 개인 서비스 부문과 소매, 관광, 그리고 의료 및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

13) 비판적 사고 없이 집단의 합의에 동의하는 경향

[그림 11-9] 전체 취업에서 고용주인 사업가의 남녀 비율

(단위: %)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3 June*, Figure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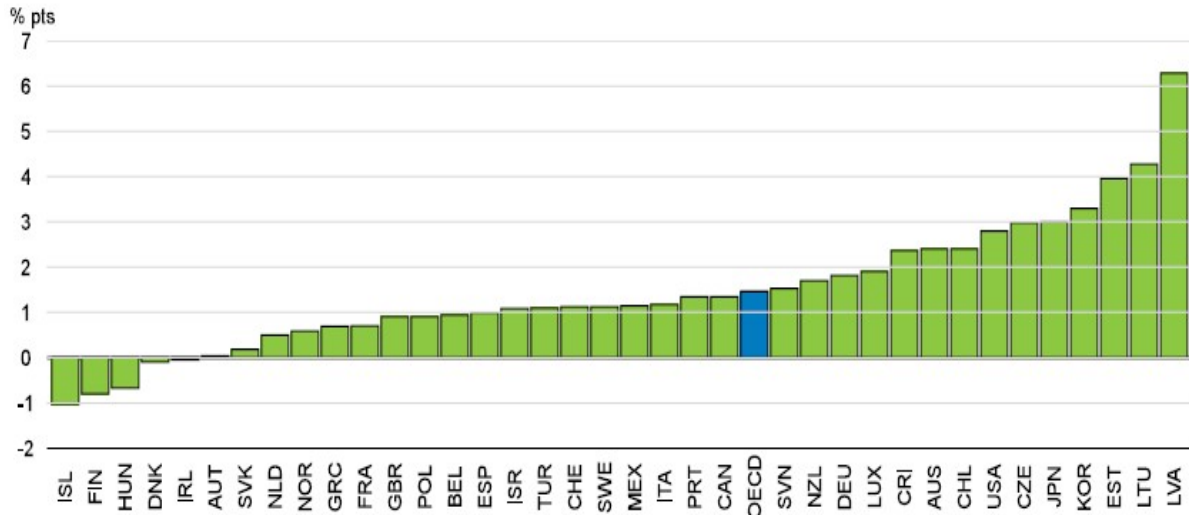
- 노동시장 참여와 창업정신을 저해하는 가족 및 세금정책, 여성의 창업정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 시장실패, 개인적 선택과 같은 제도적 장벽을 포함한 많은 요인들이 창업의 성별 격차에 기여함
 - 여성 기업가들은 남성 동료들에 비해 민간 금융에 접근하는 데 더 높은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특히 잠재력이 높은 혁신 스타트업에서 더 급격함

4. 경제적 충격과 빈곤에 더 취약한 여성

- **충격의 유형과 고용 부문에 따라 다르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경제적 충격에 더 취약한 경우가 많음**
 - 일반적으로 주로 산업 부문에 대한 충격은 남성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서비스 활동에 대한 충격은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이 대표적 사례임
 - 여성이 의료와 교육 분야의 약 3/4과 2/3를 차지하는 만큼,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에 여성이 있었음
 - 하지만,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여행과 물리적 상호작용이 필요한 산업에서도 여성이 과잉 대표되었음
 - 여성은 남성보다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에 더 자주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 경제적 압박 시 근로시간 단축에 더욱 취약함
 - 또한, 여성은 위기 상황에서 폭력, 착취, 학대 또는 괴롭힘에 대한 위험이 증가함
- **대부분의 국가(특히 아시아와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빈곤 위험이 높음([그림 II-10] 참고)**
 - 특히 미혼모나 연금소득이 낮은 고령 여성이 빈곤 위험이 높음
 - 한부모 가정은 1/3이 약간 못 되는 비율이 소득 빈곤층에 해당하며 이는 두부모 가정(two-parent families)의 빈곤율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임
 - 성별 임금 격차, 성별 연금 격차, 그리고 자녀 및 기타 친척 돌봄 비용의 증가로 인한 제한된 근로 가능성으로 인해 여성의 재정적 완충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생활비 위기도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미혼모들은 특히 높은 에너지 가격과 식비로 인한 빈곤 위험에 놓여있음
 -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오래 살고 평균적으로 낮은 연금을 받는 고령 여성은 특히 난방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빈곤과 건강 위험에 처해있음

[그림 II-10] 성별 빈곤 격차

(단위: %p)



주: 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생활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 차이를 나타냄.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3 June*, Figure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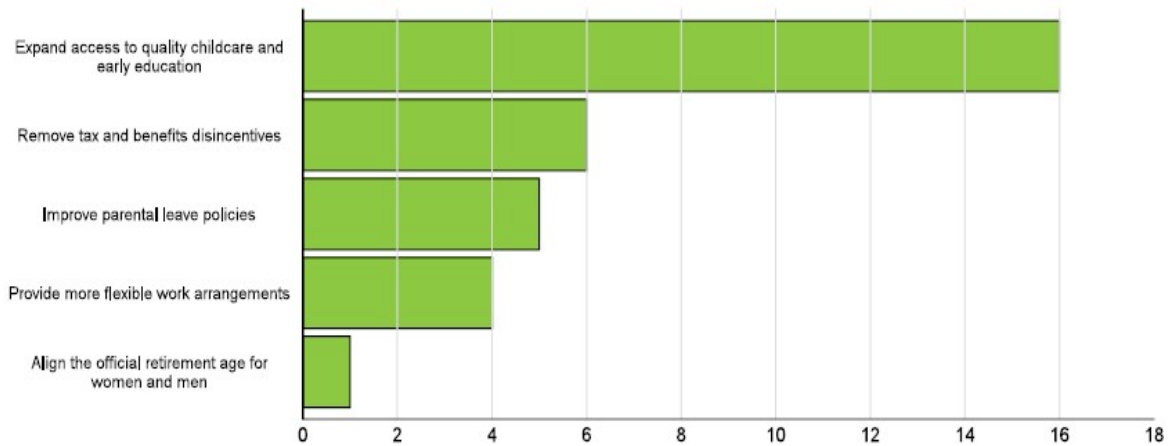
5. 정책은 여성 고용을 지원하고 동등한 기회를 육성

○ 다양한 제도적, 사회적 요인들이 성 불평등에 기여하고 있음

- 노동, 가족, 육아, 연금, 세금, 교육, 통합, 그리고 창업 정책을 포함한 광범위한 정책을 통해 해결될 필요가 있음
- ‘OECD Going for Growth’ 보고서에서 약 20개 OECD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로 젠더포용적(gender-inclusive) 노동시장 조성이 명시됨
 - 주요 조치 영역으로는 양질의 보육 및 조기 교육에 대한 접근 확대, 근로 의욕을 꺾는 세금 및 혜택 제거, 육아 휴직 정책 개선, 유연근무제 제공이 있음([그림 II-11] 참고)
- 이런 정책과 더불어 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 분야에 성별 쟁점을 주류화 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II-11] 정책 우선순위로 선정한 OECD 국가 수

(단위: 개)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3 June*, Figure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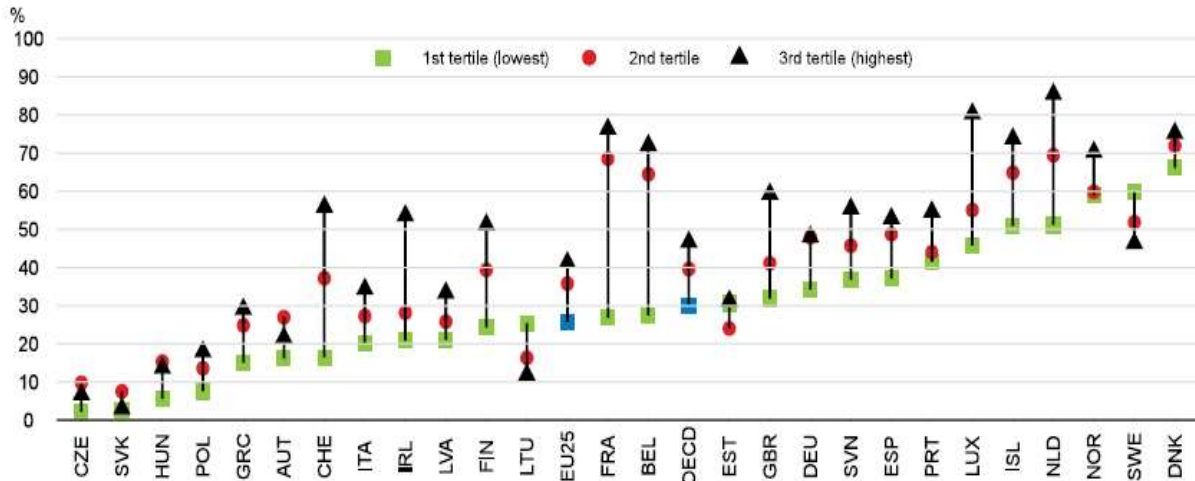
가. 보육 및 유아 교육에 대한 광범위하고 경제적인 접근의 중요성

○ 낮은 보육의 질과 비싼 보육비는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상당히 방해할 수 있음

- 적절한 보육서비스 공급은 출산 후 직장의 조기 복귀를 도우며, 부모 모두가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
- 3~5세 사이 아동의 학교 등록률은 5개국(코스타리카, 그리스, 스위스, 튀르키예, 미국)에서만 80%를 밑돌고 있음
- 반대로, 0~2세 사이의 어린이는 3명중 1명이 겨우 넘는 비율로 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음([그림 II-12] 참고)
 - 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국가 간 차이와 소득 집단 간 차이가 큼
 -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는 매우 낮고,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높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덜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은 낮은 서비스 참여율을 보임

[그림 II-12] 2020년 이후 균등화 가처분 소득 기준 유아 교육 및 보육 참여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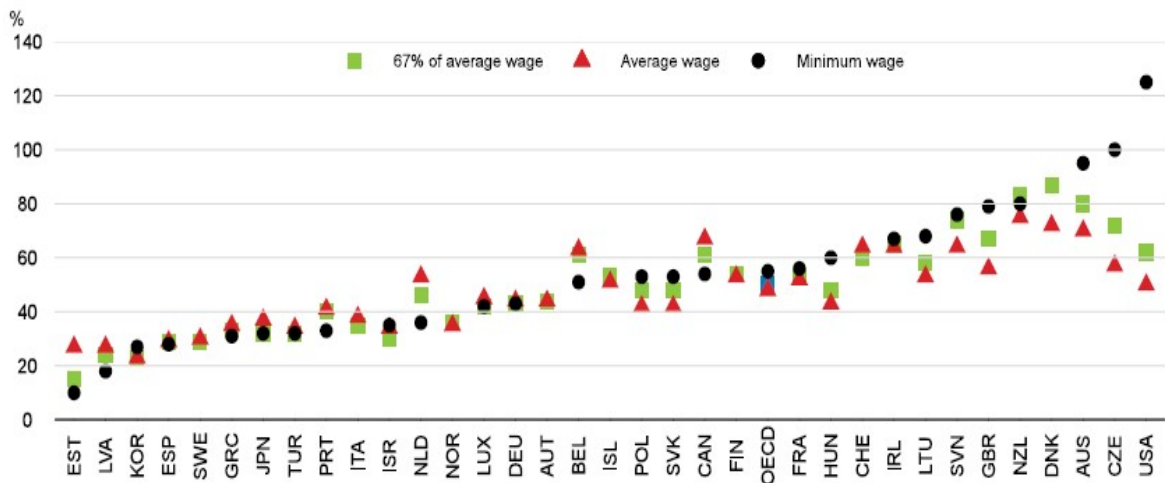
주: 0세에서 2세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함. EU-SILC 정보를 기반으로 한 OECD 추정치이며, 데이터는 센터 기반 서비스(공공 및 민간의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집 등), 가정형 어린이집, (유료)전문 보육 교사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을 의미함.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삼분위수는 자녀가 거주하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사용하여 계산하며, 12세 이하 아동의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함.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3 June*, Figure 2.12

[그림 II-13] 취업 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득 손실 비율

(단위: %)



주: 2세~3세 사이의 두 자녀를 둔 부모가 정규직으로 일하며 센터 기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 높은 세금 또는 더 낮은 복리후생으로 인한 소득 손실의 비율을 측정함.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3 June*, Figure 2.13

○ 높은 보육비는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일의 재정적 매력도를 낮출 수 있음

- 평균적으로 두 자녀의 부모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센터 기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입의 약 절반을 더 높은 세금 또는 낮은 복리후생으로 잃게 됨([그림 II-13] 참고)
-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그 손실이 크고 국가마다 차이가 큼
- 저렴하고 질 좋은 유아 교육에 대한 접근은, 엄마들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넘어, 특히 낮은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의 발달에 결정적임
- 잘 발달된 노인 돌봄 서비스는 여성 취업에도 유리할 수 있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경력을 단절시키거나 시간제 근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나. 육아휴직 제도를 통한 남녀 모두의 일과 삶의 균형 증진

○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필수인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것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고, 남성과 여성 간의 가사를 더 잘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성 평등을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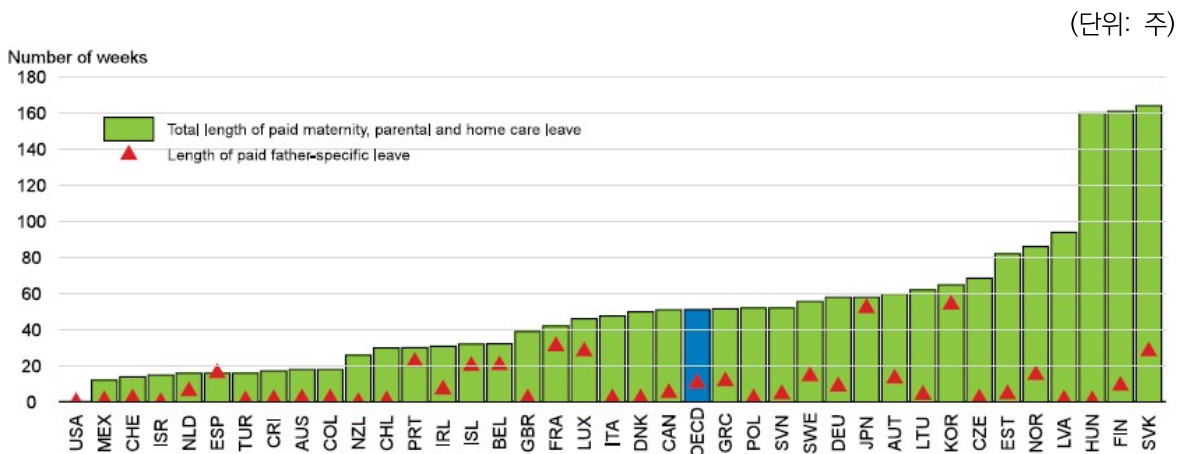
- 일과 삶의 균형 촉진을 위한 잠재적 조치는 아래와 같음
 - 근무 유형에 시간제 근로 및 기타 유연 근무 옵션 통합
 - 근무지 유연성(workplace flexibilities) 사용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
 - 가족 돌봄 의무가 있는 직원에 대해 시간제 근로를 영구적이 아닌 임시 솔루션으로 홍보
 - 시간제 근로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 및 경로 개발
- 재택근무는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 불평등, 성별 임금 격차, 성별 승진 격차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침

○ 육아 휴직 사용의 나뉠을 장려하는 기관에서도 여전히 육아 휴직은 부모 간 매우 불균등하게 사용됨

- 이러한 육아 휴직은 여성의 승진을 늦추는 경향이 있음
- OECD 국가들에서 젊은 여성들을 위한 기회는 일반적으로 증가함

- 반면, 아이가 있는 여성은 아이를 가진 이후에 입지를 잃는 경향이 있고, 때로는 직무의 질이 낮은 곳으로 이직하거나 노동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경향이 있음
- 모성과 관련된 출산 불이익(child penalty)은 더 낮은 고용률과 근로시간, 임금률로 인한 총노동소득의 장기적 손실에서 세금과 이전소득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됨
 - 출산 불이익은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약 20%,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는 50% 이상으로 추정되며, 영국과 미국은 그 사이 값으로 추정
- 최근 몇 년간, 많은 OECD 국가들의 정책 개혁은 남성이 지정된 달 또는 보너스 시스템을 통해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남성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OECD 국가의 수는 1995년 7개국에서 2020년 34개국으로 증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사용 자격은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모 간 매우 불평등하며, 육아휴직의 보다 평등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추가적 진전이 요구됨(그림 II-14) 참고
 -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연장하고 더 유연하게 만드는 것은 성 평등을 위한 광범위한 호주 국가 전략 중 하나임

[그림 II-14] 부모 간 육아휴직 사용의 불균형



주: 출산휴가는 출산 직전과 출산 직후 산모가 받을 수 있는 직무보장휴가(job-protected leave)¹⁴⁾의 주 수를 의미함. 출산휴가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없는 국가의 경우 출산전후 산모 전용 주수가 보고됨. 유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총 기간은 출산 후 여성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총 기간¹⁵⁾을 의미함. ‘유급 아버지 전용 휴직(paid father-specific leave)’이란 유급 육아휴직의 자격이 아버지에게 한정되고 어머니에게 이전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보너스 기간을 얻기 위해 아버지가 취해야 하는 유급 휴가 기간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3 June*, Figure 2.14

다. 육아휴직 연장 후 교육을 통한 업무 복귀 촉진

○ 업무 방식과 수단이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엄마들은 장기간의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어려움에 직면함

- 직업 훈련과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여성의 재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디지털 기술은 여성의 재취업 측면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
 - 접근성의 장애, 가용성, 교육 부족 및 내재된 편견과 사회문화적 규범이 종종 디지털 전환에 의해 제공되는 기회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축소하기 때문
- 녹색 전환은 특히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에 대한 조기 참여를 장려하고, 진로 지도 제공과 동시에 주로 남성이 차지한 공해 일자리(polluting jobs)에서 근로자들에게 재교육과 기술 향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새로운 녹색 일자리(green-task jobs)에 대한 접근을 넓힐 것을 요구함

라. 기업의 성별관련 정보공개를 통한 양성평등적 승진 지원

○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여성의 더 나은 일자리 접근을 촉진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 동일한 기업이 유사한 기술을 가진 여성과 남성 중 남성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여성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됨
- 정책 조치로는 공시 의무, 양성평등 평가, 직무 분류 시스템, 자발적 목표 설정, 고위직 또는 회사 이사회의 여성 할당제 의무화와 같은 급여 투명성 조치가 포함됨
- 현재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이 민간 부문 기업에 성별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많은 보고 체계가 광범위한 동등 임금 평가 제도에 포함됨
 - 정부는 보고 체계가 중소기업과 불안정한 직무에 있는 근로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

14) 출산 휴가 이후 여성이 일자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함

15) 출산휴가, 부모휴가, 가정보육휴가를 모두 포함한 기간

- 또한, 보고 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며, 그 효과에 대한 보다 빈번하고 엄격한 평가를 실시해야함
- 기업, 직원, 대표자 그리고 대중 간의 임금 격차 보고 규정 및 결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함

마. 세금 및 연금 제도의 편견 해결

○ 임금 불이익(wage disadvantages)은 세금과 복지 제도에 의해 가중될 수 있음

- 근로 의욕 저하를 조성하는 데 있어 2차 소득자(흔히 여성)에 대한 과세의 역할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옴
 - 세제의 누진성은 시간제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이 과 대표됨
 - 그러나 시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이 되면, 세액공제 및 수당(보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누진성은 시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저해함
 - 가구 기반 과세에서 개인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2차 소득자의 부정적인 근로 인센티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 OECD 국가 중 18개국은 개별과세를, 5개국은 가구수준 과세를, 6개국은 둘 사이의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음¹⁶⁾
 - 또한, 세액 공제 및 수당, 누진 과세 제도, 그리고 사회 보장 기여금의 성별 영향을 조세 제도를 개선하고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영역으로 식별함¹⁷⁾
- 낮은 임금과 경력 단절은 여성의 연금을 낮춤
-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퇴직금제도(retirement savings arrangements)의 일부 조정은 여성의 퇴직 연금(retirement benefits)에서 존재하는 기존 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예를 들어, 자격 기준이 근로시간이나 소득에 기반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기여금이 중단되는 경우, 이혼 시 여성이 퇴직급여 수급권의 몫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퇴직연금의 특정한 특징이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음

16) OECD Tax&Gender Stocktaking Questionnaire(2021) 조사에 응답한 OECD 회원국의 응답 결과
17) 상동

바. 맞춤형 노동시장프로그램을 통한 외국 태생 여성 통합

○ 외국 태생 여성의 효과적인 통합은 성별 격차 감소와 이주민 자녀의 성공적인 융화를 포함한 더 광범위한 양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함

- 가족 이동을 통해 OECD 국가로 이주한 많은 여성들은 노동시장과의 연관성이 약함
 - 이들은 이주국에서 외국인 자격과 역량을 인정받기 위해 매우 노력함
- 이주 여성 접촉 프로그램, 통합 과정, 이주 여성의 교육 및 기타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 참여는 경제 및 사회 통합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예를 들어, 최근 이주한 이민자들을 위한 ‘Swedish Establishment Programme’과 외국 태생 여성들의 일자리 매칭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 ‘Equal Establishment’ 시범 사업과 같은 계획은 잘 조정된 적극적인 노동 정책 조치가 이민자 여성의 고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사. 관리직 및 창업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증진

○ 많은 국가들은 쿼터제, 목표 및 공시 의무를 포함하여 이사회 및 경영진에서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

- 예를 들어, 쿼터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시행함
- 상장기업에서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할당제를 도입한 국가는 평균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이사회 성별이 더욱 다양해짐
-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종종 소수의 여성들이 여러 이사회 의원으로 근무하거나, 친인척이 임명되는 결과로 나타남
- 또한, 회사 이사회 여성 비율과 관리직에서의 여성 비율 사이에는 큰 연관성이 없음
- 이는 여성의 전문성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옹호 및 인식 제고 이니셔티브와 같은 리더십 포지션의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적 계획을 요구

○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 강화 필요

- 최근 OECD 분석에 따르면, 창업 정책과 프로그램은 성 중립적이지 않음
-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경험하는 창업에 대한 장벽을 해결하고, 여성이 기업가 정책 지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뚜렷한 접근법 필요
- 성평등 향상을 위한 일반적인 정책으로는 창업 문화, 역량 개발, 금융 접근성, 창업 네트워크 및 생태계 촉진에 대한 조치가 있지만, 여성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불충분하며 아래 우선순위에 대한 추가 조치가 요구됨
 - 여성 창업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프레임워크 도입
 - 여성 창업에 대한 정책 개입을 제도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더 잘 적용
 - 정책 주도권을 확장하기 위한 기초로서 정책 평가 강화
- 여성 소유 사업을 지원하는 구체적 조치 중 하나는 여성 기업가를 위한 선택적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것임

아. 여성의 포용 금융 향상

○ 여성의 재정적 권한, 기회,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은 필수적임

- 많은 국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금융 지식이 부족하며, 금융 지식 및 역량에 대한 자신감과 공식적인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
- 여성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저축과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성별 격차는 사회 경제적 조건, 역량, 태도, 기회의 차이를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상호연관적인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주도됨
- 여성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저소득 여성 또는 소규모 기업가와 같은 하위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여성의 금융 포용과 저축 상품 사용 개선

- 과도한 부채 방지
- 여성의 은퇴 계획 지원
- 여성 창업 지원
- 프로그램은 여성의 재정적 지식, 자신감, 재정 전략과 관련하여 특정 요구에 따라 맞춤화되어야 하며, 특히 생계유지, 저축, 금융상품 선택 및 이용, 정보와 조언을 얻는 능력에 중점을 두어야 함
 - 모든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야하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함
- 또한, 동일한 위험 수준에서 여성에게 높은 이자율이 부과되거나, 신용거래에 대한 접근이 지나치게 거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
 - 미국 모기지 시장에서 여성을 비슷한 신용 정보를 가진 남성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성과가 더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자율과 승인율에는 반영되지 않음

자. 정책 전반에 걸친 성 주류화

- **성 불평등의 다양한 관점과 근본적 원인은 정책적으로 성별 쟁점을 주류화하는 이점을 강조함**
 - 성 주류화는 양성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법이나 자격요건의 도입을 포함할 수 있음
 - 2017년부터 2022년 동안에 OECD 9개국은 최소 하나의 정책 영역에서 성 주류화를 지지하는 새로운 법률 또는 규정을 도입함
 - 문서, 정부의 공식적 약속, 전용 프로그램에 반영된 전략적 계획은 성 주류화를 위한 또 다른 강력한 방안임
 -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들은 정부 프로그램에서 양성 평등 우선순위를 발전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을 도입함
 -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ing)은 현재 OECD 국가의 60% 이상에서 사용되는 양성 평등 정책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도구임

- OECD는 정책 입안자들이 자국과 업무 환경에서 약점과 기회를 파악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성 평등 주류화 및 실현에 관한 툴킷(toolkit)을 개발

- **성별에 따라 분류된 데이터는 성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증거 기반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임**
 - 예를 들어, 세금의 성별 영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에서 격차가 확인됨
 - 스웨덴의 연례 보고서와 같이, 연령, 교육, 직업, 고용 분야, 근로 시간과 관련된 차이를 성차별과 구분하는 상세하고 적시적인 정보는 시정 조치를 촉진할 수 있음
 - 이러한 사례는 성별 관련 데이터 수집과 분포를 확대하는 것의 이점을 보여줌
 - NGO 및 여성 단체를 포함한 시민 사회단체는 정부 정책의 잠재적 또는 실제적 영향에 대한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되며, 정기적인 자문이 필요함
 - 다양성 정책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는 설문조사, 인터뷰, 검토, 여론 조사, 표본 집단 토론, 벤치마킹이 있음
 -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성별 세분화된 데이터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보장하고, 공공의견 수렴을 통해 부족한 정보를 수집하며, 정보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공무원과 통계학자의 성 관련 문제 인식 개선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함

III 주요국의 경제 및 재정전망

1. 브라질

- (경제현황) 2023년 1분기 경제활동은 서비스와 농업부문의 성장세에 힘입어 2% 증가
 - 2023년 1월 소매판매 3.8% 증가, 2023년 농업생산량 신기록 도달 예상
 - 반면 산업부문은 원자재, 전자부품 및 기타 투입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제약으로 계속 침체되어 팬데믹 이전 대비 2.2% 낮은 수준
 - 2023년 1분기 민간투자 3.4% 감소, 일자리 창출 감소로 실업률 소폭 증가
 - 물가상승률은 일부 에너지에 대한 일시적 세금면제 조치 철회에도 불구하고 하락
 - 물가상승률은 2023년 2월 5.6%에서 4월 4.2%로 하락
- (통화·재정) 단기 통화정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확장적 재정정책이 전망
 - 2023년 물가상승률은 목표수준(1.75~3.75%)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브라질 중앙은행은 2023년 3분기까지 정책금리 13.7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2023년 말부터 2024년 말까지 정책금리는 1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2023년 재정정책은 2022년 12월 재정패키지 도입으로 확장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재정패키지는 조건부 현금이전지출 50% 유지, 공무원 임금 인상 조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에너지에 대한 면세는 부분적으로 철회됨
 - 정부는 투자지출과 관련한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지출의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관리체계를 제안하였으며, 이는 기초재정적자에 대한 연간 목표를 설정함
 - 세금징수의 효율성 개선, 공공지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과정에 정기적인 지출검토 내용을 포함

○ (경제전망)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내수성장의 둔화로 경제성장률은 2023년 1.7%, 2024년 1.2%로 하락할 전망

- 2023년까지 가계소비와 투자는 둔화될 것이며, 긴축 통화정책이 대출 금리를 인상시킬 것으로 보임
-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은 농업 생산량, 서비스부문의 회복이며, 브라질 수출에 대한 외부 수요도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순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브라질 경제에 대한 신용 약화와 다소 높은 실업률은 가계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고 물가상승률을 감소시키는데 기여
 - 물가상승률은 2022년 9.3%에서 2023년 5.6%, 2024년 4.7%로 감소 전망
- 경제활동에 대한 위험요인은 균형을 이룸
 - (상방요인) 브라질 주요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강력한 경제성장으로 수출 촉진, 새로운 재정 관리체계의 성공적인 이행으로 공공재정에 대한 신뢰 향상 및 투자 강화
 - (하방요인) 2023년 세제 개혁 및 새로운 재정 관리체계 실패 시 신뢰 약화로 경제성장 감소 가능성, 물가상승률의 완만한 감소로 인한 정책금리 인하 시기 지연은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킴, 선진국의 정책금리 추가 인상으로 환율 상승 압력이 가중됨

○ (정책제언) 재정 관리체계와 세제개혁 채택은 신뢰 향상 및 채무 통제에 핵심

- 중기 재정 관리체계 시행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일관된 거시경제정책 마련에 도움
- 공공 인프라 투자를 보다 잘 관리하고 간접세의 단순화, 효과적인 사회이전지출을 통해 공공재정을 개선하는 동시에 잠재적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높일 수 있음
-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복잡한 과세 시스템 개혁으로 기업의 높은 행정 부담을 감소시키고 인구 증가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과 성장 제고를 통해 브라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 농업부문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인센티브 제공 및 불법 삼림 벌채의 종식은 더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

- 농업부문 대출 프로그램을 저탄소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경우 탄소배출과 토양 황폐화 완화에 도움이 될 것
 - 황폐화된 목초지의 복구, 작물-가축-임업 통합, 동물 폐기물 처리 확대 및 식림 등에 대한 기존 시범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음
- 조건부 현금 이전 지출의 선별적 지원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기타 사회적 지원 강화가 필요
 - 저소득 가구의 유아 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는 기회 불평등을 개선하여 더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

〈표 III-1〉 브라질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2020	2021	2022	2023	2024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3.6	5.3	3.0	1.7	1.2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3.2	8.3	9.3	5.6	4.7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¹	-13.3	-4.6	-4.7	-6.7	-6.6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¹	-1.8	-2.8	-2.9	-2.0	-1.8

주: 1.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2. 캐나다

○ (경제현황) 2023년 1분기 강한 경제성장과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하락

- 제조, 건설 및 서비스업의 성장은 천연자원 산업의 생산 감소를 상쇄
- 높은 차입비용은 주택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수도권 집 값 및 주택 매매는 1년 전보다 낮은 수준이나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높은 물가상승률이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활동은 위축될 것이라는 예측에 반하고 있음
-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나 최근 실업률이 저점에서 상승함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 감소
-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식품가격 하락 등에 기인하여 하락
 - 4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대비 4.4%로 2022년 6월 8.1%보다 낮은 수준
- 원유가격 하락으로 캐나다의 원자재 수출가격은 2022년 중반 대비 낮은 수준
 - 교역조건의 악화는 소득 충격을 야기하여 비금융 기업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킴
-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캐나다 금융상황을 긴축시켰으며, 특히 가계 대출이 둔화됨

○ (통화·재정)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긴축 통화정책을 유지

- 긴축 통화정책은 초과 수요를 억제하고 물가상승률 기대치를 고정시키는데 도움
 - 정책금리는 2024년 중반까지 현재 수준인 4.5%를 유지해야하고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를 중립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함
 - 기준금리는 2024년 말까지 50bp 인하 예상
- 향후 2년간 재정적자 감축이 예상되며 연방정부는 녹색투자 촉진을 위해 의료 및 인센티브에 대한 새로운 지출계획을 발표

- 또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조치는 생계비 압력으로부터 가계 재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연방정부는 높은 식품 가격으로 타격을 입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상품 및 서비스 세액공제 강화를 발표
 - 앨버타와 온타리오를 포함한 일부 주정부는 에너지비용 하락에도 불구하고 연료세 인하 등의 조치를 유지
- 2023년 말까지 물가상승률 완화 조치를 철회할 경우 2024년 재정수지 개선에 기여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감소가 예상됨

○ (경제전망) 국내경제활동 둔화로 경제성장률은 2023년 1.4%로 하락할 전망

- 미국 경제성장의 둔화는 캐나다 수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
- 차입비용 증가, 수요전망 둔화로 인해 기업은 자본지출 계획을 연기할 것으로 예상
 - 올해 상반기 주택투자의 추가적 감소는 민간 총 고정자본 형성 감소에도 기여
- 민간 소비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긍정적으로 전망
- 인구 증가 대비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어 실업률은 증가할 전망이며, 임금상승률은 완만하게 증가하여 소비자 물가상승률 보다 낮게 유지될 전망
-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한 요인이 존재
 - 일자리 창출이 예상보다 더 둔화될 경우 높은 가계부채 수준 및 모기지 서비스 비용의 증가는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음
 - 주요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로 기업투자가 감소
 - 이민은 단기적으로 인구고령화를 늦추고 경제성장을 높일 수 있음
 - 생산가능 인구 증가로 인한 직접적인 보상을 넘어 신규 이민자의 기술력과 노동 참여율이 높아질 경우 생산능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물가상승률의 상승 압력은 가속화되지 않고 더 강한 수요가 발생

○ (정책제언) 낮아진 물가상승률로 인해 생활비 지원 조치 필요성이 감소

- 주정부가 연료세 인하 조치를 철회할 경우 연방정부의 녹색투자 정책에 대한 투자 조치를 보완할 수 있음
 - 물가상승률이 완만한 수준으로 돌아올 경우 연방 및 지방정부는 재정부양책을 감소하고 생활비 지원 조치를 철회해야 함
- 내부무역에 대한 장벽 축소 및 노동이동성 촉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미래의 주택가격 압력을 막기 위해 고밀화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완화할 경우 도시에 더 많은 주택 건설이 가능

〈표 III-2〉 캐나다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2020	2021	2022	2023	2024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5.1	5.0	3.4	1.4	1.4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¹	0.7	3.4	6.8	3.5	2.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²	9.7	7.5	5.3	5.2	5.7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³	-10.9	-4.4	-0.8	-0.4	-0.3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³	129.2	120.9	100.9	101.0	101.1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³	-2.2	-0.3	-0.3	-1.4	-1.5

주: 1.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food and energy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3. 중국

○ (경제현황) 코로나19 관련 규제 완화로 2023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5%로 반등

- 제로 코로나19 규제 해제로 억눌린 수요가 해소되어 숙박,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 직접서비스가 강하게 반등했으나 전반적인 소비는 여전히 부진
- 중국은 세계 식량 및 에너지 시장의 충격으로부터 영향이 적음
 - 식품 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수입량에 제한이 있고 할당량 형태의 대규모 곡물 비축과 수출제한은 세계 곡물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위험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임
 - 국내에서 생산된 석탄은 난방용으로 사용하여 세계 시장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석유와 가스는 대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할인된 러시아의 우랄산 원유와 LNG 수입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하고 있음
- 수요 회복은 물가상승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은 완만한 수준을 유지

○ (통화·재정) 경제회복을 위한 통화 및 재정정책을 지속

- 통화정책은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적절한 유동성을 보장
- 최근 몇 개월 간 기준 금리는 안정적으로 유지, 지급준비율은 소폭 인하되었음
 - 2022년 자본유출과 통화가치의 하락으로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하락
 - 2022년 9월 주요 대출기관의 예금금리 조정, 2023년 초 첫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새로운 주택담보 대출금리 조정 조치를 도입
-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 시행, 최초 구매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및 기타 조치 등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매입자격 등의 규제가 수요를 억제하여 반등은 완만할 것으로 예상
- 그림자 금융¹⁸⁾은 안정세를 보이며 신용공급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나 수요는 점차 반등, 봉쇄기간동안 축적된 저축은 부동산 시장 또는 가계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음

- 감세 및 면세를 통한 재정지원 조치가 계속 지속될 것이며, 세금 유예 조치는 대부분 종료
 - 2022년 발행된 지역특수채권 수익금 일부는 올해 사용하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면제 및 연구비용 공제 등을 포함한 경제회복축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고 있음
 - 개발은행들은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를 지원
 - 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체를 위한 이자보조금을 지원

○ (경제전망) 경제성장률은 2023년 5.4%, 2024년 5.1%로 전망

- 인프라 투자는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부동산 투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와 소비자 신뢰도 향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세계 수요의 반등으로 인한 수출 회복, 관광수입의 증가, 인프라 투자로 인해 원자재 수요는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적 성장전망이 감소하여 경제회복 속도가 제한됨
- 기업채무불이행이 증가할 경우 금융부문 및 개인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주요 하방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특히 청년 실업률), 낮은 일자리 증가율, 점진적인 소비 회복 등이 있음
-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인 채무 불이행과 무분별한 디레버리징이 소규모 은행과 그림자 금융기관의 도산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음
- 반면 조치를 완화하고 부동산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미래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주택가격 반등이 강해지면 축적된 저축이 부동산 부문으로 전환되어 주택 관련 소비가 되살아날 수 있음

18) 은행과 비슷한 신용중개 기능을 하나 은행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의미

○ (정책제언) 경제회복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

- 행정적 독점 철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와 근본적인 성장을 지원
-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혁으로 예비저축을 감소시키고 가계소비로 수요를 재조정할 수 있음
- 연금과 실업보험 적용범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제 및 의약품 목록의 확대 필요
- 동일 임금법의 엄격한 시행 등 양성평등 보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

〈표 III-3〉 중국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2020	2021	2022	2023	2024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2.2	8.4	3.0	5.4	5.1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2.5	0.8	1.9	2.1	2.0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¹	-7.0	-6.6	-6.7	-6.7	-6.6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¹	1.7	2.0	2.2	2.5	2.4

주: 1.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4. 유로지역

○ (경제현황) 지속적인 근원 물가상승률, 높은 불확실성이 경제전망에 부담으로 작용

- 2023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 증가
-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은 지난 10월 최고치인 10.6%에서 5월 6.1%로 완화됨
 - 반면 근원 물가상승률 및 장기적인 기대 물가상승률 역시 증가
-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고 2023년 4월 유로지역의 계절 조정 된 실업률은 6.5%이며, 많은 국가에서 임금 인상 및 인상 요구가 증가
- 최근 미국 은행 부문의 혼란은 유로지역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없었으나 시장의 압력은 은행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자본비용을 증가시킴

- 에너지 위기는 완화되었으나 에너지 집약 산업은 부진
 - 에너지 공급 다변화, 비교적 온화했던 겨울날씨의 영향으로 에너지 위기 완화
 -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에너지 집약 산업의 생산량은 감소 또는 감축됨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속적인 공급망 혼란, 일부 농산물 가격상승이 유로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줌
 - EU 국가들은 약 4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 충당을 위해 결속기금 및 팬데믹 회복 기금에서 270억 유로(유로지역 GDP의 0.23%)를 확보
- (통화·재정) 물가상승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거시경제정책 강화가 필요
- 국가별로 상이한 상황이나 전반적인 유로지역 재정정책은 2023년에 제한적일 것이며 2024년은 더욱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일부 유로지역 국가는 2022년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여 GDP의 2% 이상의 재정지원 조치를 시행
 - 공공재정의 악화를 억제하고 긴축 거시경제정책을 위해 취약가구 대상 소득지원 조치의 점진적인 철회가 필요
 - 유럽중앙은행은 긴축 통화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금리 인상이 필요
 - 은행부문의 혼란에 따른 지속적인 물가상승률, 소득 감소 및 불확실성의 증가로 단호한 정책조치가 필요
- (경제전망) 점진적인 실질 소득의 회복으로 2024년 경제성장은 반등할 전망
- 경제성장률은 2023년 0.9%로 둔화된 후 2024년 1.5%로 증가할 예정
 - 2023년 분기별 경제성장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병목현상 지속, 엄격한 자금조달 조건 등의 영향으로 둔화 예상
 -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8% 예상,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의 부진은 민간소비에 부담이 됨

- 경제회복기금(NGEU)에 따라 연간 국내총생산량 1%에 조금 못 미치는 추가 지출이 경제성장 둔화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나 높은 불확실성과 긴축 재정조건으로 투자는 지연될 전망
- 낮은 에너지 가격과 국내성장 둔화는 2023년 헤드라인 물가상승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2024년 말에도 근원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유럽중앙은행 물가상승률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 위기의 재촉발 우려, 무역 긴장(글로벌 공급망 추가 분열과 무역장벽), 금융안정성 위험 증가, 긴축 통화정책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의 하방위험으로 경제전망은 부정적임
-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로 인한 에너지 및 식량가격에 대한 상승압력 완화, 중국의 경제회복으로 인한 외부수요 증가 등 긍정적 측면도 존재

○ (정책제언) 생산능력의 확대 및 녹색전환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

- 차세대 EU 기금은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 및 녹색 전환을 가속화 함
-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치는 에너지 소비 감소 및 재정지속가능성을 위해 점진적인 철회가 필요
-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유럽 차원의 정책 프레임이 필요

〈표 III-4〉 유로지역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2020	2021	2022	2023	2024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6.2	5.2	3.5	0.9	1.5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0.3	2.6	8.4	5.8	3.2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7.9	7.7	6.7	6.7	6.6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7.1	-5.3	-3.6	-2.9	-2.2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121.9	116.3	96.9	95.9	95.6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²	2.6	3.7	0.7	2.4	2.6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5. 프랑스

○ (경제현황) 에너지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및 공급망 붕괴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

- 물가상승률은 2023년 6.1%에서 2024년 3.1%로 하락하여 가계 구매력과 소비 증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 강력한 비즈니스 투자와 탄력적인 노동시장은 2022~2023년 겨울 경제성장을 견인했지만 경제성장률은 2022년 4분기 정체, 2023년 1분기 0.2% 증가
- 높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에너지 가격, 긴축 재정 및 실질 임금감소로 인해 민간 소비와 주거 투자는 저조
- 식품 물가상승률 13.6%, 근원 물가상승률 4.3%로 증가하면서 5월까지 소비자 물가는 6.0% 증가
- 무역적자는 2022년 경제성장률의 4.2%로 확대됨
 - 강력한 서비스 부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입비용 증가, 항공 및 자동차 부문의 지속적인 어려움, 제한된 원자력 에너지 생산 능력 등으로 영향
- 2023년 에너지 관련 재정지원 조치의 총 소요비용은 GDP의 1.6% 수준

○ (통화·재정) 재정조치는 외부 충격을 부분적으로 완화시켰으며, 2023년 및 2024년 재정건전화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 광범위한 에너지 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와 코로나19관련 지출의 단계적 폐지로 인해 2022년 재정적자는 GDP의 4.7%로 감소
- 정부는 2023년 가스 및 전기요금 상한 유지, 저소득 가구 에너지 바우처는 확대했으나 연료세 감면은 폐지
- 사회복지 및 공공임금 인상, 전기 생산자 및 정유소에 대한 일회성 세금은 기업을 위한 추가적인 에너지 지원 임시조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도움이 됨
- 높은 에너지 가격 충격 완화를 위한 재정조치는 2024년 말 까지 단계적 폐지가 예상
 - 2023년 에너지 지원 직접조치는 453억 유로(GDP의 1.6%)로 추정

-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추가 조치는 2023~2024년 150억 유로 상당의 복구 계획 지출, 2023~2024년 주택 및 법인세 인하를 포함
 - 2024년 실업보험개혁과 예정된 연금 개혁으로 일부 재정절감효과가 발생할 전망
 - 통화 및 재정상황은 유로지역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나 차세대 EU 계획은 375억 유로의 보조금과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한 투자를 지원
 - 2022년 복원계획은 주택 개조와 단열을 위한 자금지원을 추진했으며, 에너지 절약 계획은 2024년까지 에너지 소비 10% 감소를 목표로 함
 - 피해가 큰 기업에 대한 정부 보증 대출과 보조금이 기업투자를 지원할 전망
 - 가계를 위한 차량 및 에너지 투자 보조금은 친환경 대안을 목표로 하며 주택 투자 및 내구재 소비를 증가시킴
 - 인프라 및 디지털화에 대한 공공투자와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자금조달은 생산성과 장기적인 성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 (경제전망) 실질 경제성장률은 2023년 0.8%, 2024년 1.3%로 전망되며, 국내 수요는 서서히 회복될 전망
- 낮은 기업 및 가계 심리, 완만한 세계경제성장 전망, 높은 불확실성은 투자와 수출을 저해
 - 긴축 재정조건과 노동시장의 약화는 근원 물가상승률과 임금증가를 억제하고 주택 투자를 제한
 - 2024년 실업률은 7.2%, 2024년 공공부채는 GDP의 113% 이상으로 예상
 - 지정학적 긴장의 악화, 에너지 시장 및 공급망의 재충단 등은 프랑스의 물류, 여행 및 관광서비스와 같은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일부 기업의 과도한 정부대출보증은 기업의 유동성 및 지급 능력 문제뿐만 아니라 파산 우려 및 성장전망을 악화시킴
 - 가계저축 전망은 불확실하며 저축률은 내수성장의 증감에 영향을 미침
- (정책제언)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이 필요

- 무조건적인 에너지 가격 지원책(가격 상한선)은 재정소요가 크고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함
 -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높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한 일시적 지원 조치는 필요
- 불확실성과 물가 압력이 완화되고 경제성장기반이 확고해짐에 따라 지출검토를 통해 공공지출 감소 및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중기재정전략 시행이 필요
- 녹색 대안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 노력이 요구됨
- 주택개조와 에너지 절약을 가속화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며, 관련 지원 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
- 저 숙련 및 장기 실업자의 평생 학습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보장하고 어릴 때부터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형평성을 보장하고 성별 불평등을 감소시킬

〈표 III-5〉 프랑스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2020	2021	2022	2023	2024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7.7	6.4	2.5	0.8	1.3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0.5	2.1	5.9	6.1	3.1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8.1	7.9	7.3	7.2	7.2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9.0	-6.5	-4.7	-4.8	-4.4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146.0	138.7	117.7	118.1	119.7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²	-1.8	0.4	-2.2	-1.6	-1.5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6. 독일

○ (경제현황) 높은 물가상승률은 민간 소비에 부담

- 경제성장률은 2022년 4분기 2.1%, 2023년 1분기 1.2%로 감소되었으며, 주로 민간 소비 감소에 기인
- 높은 물가상승률은 2022년 4분기 실질임금을 5.4% 하락시켰으며, 불확실성의 고조, 높은 에너지 가격 및 자재 부족은 제조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침
- 그러나 2023년 초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되고 산업 생산, 투자 및 수출이 증가하여 비즈니스 투자는 2023년 1분기 12.7%로 증가
-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은 4월 7.6% 대비 감소하여 5월 6.3%를 기록하였으나 근원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 실업률은 3월 2.8%로 하락
- 독일은 전쟁 이전 주요 에너지 공급의 1/3이 러시아로부터 공급되었으나 에너지 공급 다각화, 러시아산 석탄 금수 조치, 가스 파이프라인 폐쇄 등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이 크게 감소
- 내년 겨울 가스 가격 상승 및 연료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가스 소비의 약 20%를 감소해야 함
- 전쟁으로 인해 순수입 된 우크라이나 난민은 2023년 2월까지 약 100만 명(인구의 1.3%)

○ (통화·재정) 에너지 가격에 대한 조치 및 공공 투자는 경제회복을 지원할 전망

- 에너지 가격 보조금과 LNG 터미널의 빠른 건설은 에너지 도매가를 낮추고 투자자 및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킴
- 3가지 구제 패키지와 2,000억 유로 규모(GDP의 5.5%)의 에너지 지원기금이 마련되어 있음
 - 구제 패키지는 실질 소득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임시 조치가 포함되어 있음
 - 차입으로 마련된 에너지 지원기금은 2023년 12월까지 전기 및 가스 보조금 뿐 만 아니라 기업의 유동성 지원 및 보조금 등을 지원(2024년 4월까지 연장가능)
 - 2022년 12월 이후 에너지 도매가격 하락에 따른 소매가격 하락으로 재정소요는 2023년 약 1%, 2024년 0.5% 절감될 것으로 예상

-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2026년까지 약 2,000억 유로(GDP의 5.5%)를 투자하고 향후 몇 년간 군사장비 성능 향상을 위해 1,000억 유로를 지출할 계획
 - 에너지 지원 기금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는 그림자 예산¹⁹⁾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며, 건설부분의 제약, 복잡한 계획 및 승인 절차로 지출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 (경제전망) 경제는 서서히 회복할 전망

- 2023년 경기는 침체되고 2024년 경제성장률은 1.3% 증가할 전망
 - 높은 물가상승률의 영향으로 실질소득과 저축이 감소하여 민간소비를 위축시킴
 - 공급망 병목현상 완화와 수출이 경제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보임
- 강력한 에너지 가격 지원,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품의 신속한 대체,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와 소비자의 심리가 개선됨
- 금리상승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공급망 재배치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과 관련된 수요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
- 2023년 물가상승률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 에너지 가격 압력 감소 및 긴축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은 2024년 물가상승률을 3%로 감소시킴
- 2024년 실질임금 인상이 민간소비 회복을 뒷받침할 예정
- 주요 하방위험은 내년 겨울 가스 가격과 가스 배급 문제(LNG 인프라 구축 지연)이며, 계획된 재정지원조치가 가스 절약에 대한 충분한 가격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공급 차질이 발생 가능
 - 또한 지정학적 긴장으로 추가적인 무역혼란 야기, 금리인상으로 수출수요 하락 등의 하방 위험요인 존재

19) 공기업의 사업계획에 사용되는 예산 등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예산을 의미, 공기업 부채는 국제기준상 국가채무에서 제외됨

○ (정책제언)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해 지자체 및 주정부 수준의 복잡한 계획 및 승인 절차를 신속화 하는 것이 중요
- 경제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공공부문의 신속한 현대화, 정부 차원의 정책 및 행정절차의 조정 등이 요구됨
- 공공투자를 위한 추가자원 확보를 위해 지출검토를 통한 공공지출의 효율성 향상, 퇴행적이고 환경에 해로운 보조금 및 세금면제 감소, 세금집행 개선이 필요
-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정책을 개선하여 여성, 저숙련 및 고령 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현행 소득세(부부합산과세)의 개혁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고 성 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

〈표 III-6〉 독일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2020	2021	2022	2023	2024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4.1	2.6	1.9	0.0	1.3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0.4	3.2	5.7	6.3	3.0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3.7	3.6	3.1	2.9	2.8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4.3	-3.7	-2.6	-1.8	-0.8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81.7	79.8	65.4	65.0	64.7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²	6.8	7.4	3.7	5.4	5.9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7. 인도

○ (경제현황) 글로벌 수요 약세와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긴축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경제성장 둔화

- 2022-23회계연도 상품무역 적자는 전년도 대비 40% 더 늘었으며 그 중 5분의 2 이상을 석유 무역 적자가 차지
 - 서비스 부문 수출의 성장이 활발하고, 부문별 흑자가 35% 증가하였으나 무역 불균형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 낮은 노동생산성은 '메이드 인 인디아' 상품의 경쟁력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부정적 영향
- 2022-23회계연도 4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2.2%로 전년 동기 GDP 대비 2.7%보다 감소한 수치
- 2023년 3월 이후 물가상승률은 식품 가격 하락과 기저 효과로 인해 중앙은행의 허용 범위의 상한선인 6% 아래로 떨어짐

○ (통화·재정) 거시경제 정책은 여전히 제한적

- 통화정책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하고 물가상승률을 2~6%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초점
 - 정책금리 인상 사이클은 지난 4월에 중단되었고 한 차례 소폭으로 추가 인상한 이후 연말까지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중반부터 완만한 금리 하락이 이어질 전망
- 재정정책의 우선순위는 정부부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고 이자 지급 비용을 줄여 물적·인적 자본에 대한 공공 투자 및 인구 고령화에 적응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자원을 확보하는 것
- 인도 독립 100주년인 2047년까지 향후 25년은 인도가 빈곤과 싸우는 데 중요한 시기(Amrit Kaal²⁰)가 될 것이므로 정부는 자본투자지출을 크게 늘릴 예정

20) Amrit Kaal: '큰 문이 열리는 중요한 시기'를 뜻함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 인프라 개발에 박차.. '보편적 복지'와 '포용적 성장' 강조」, <https://blog.naver.com/kiieblog/222656669759>, 검색일자: 2023.6.22.)

○ (경제전망)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실질 GDP 성장률은 2022-23회계연도에 7.2%에 도달한 후, 2023-24회계연도에 6%로 둔화되었다가 2024-25회계연도에 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현재 인도의 성장은 안정적이지만 선진국의 급격한 긴축 통화정책,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의 증대, 국내 긴축 정책의 지연된 영향 등으로 인한 역풍이 점진적으로 작용할 전망
-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기대물가상승률, 주택가격, 임금 상승이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물가상승률이 4.5%로 수렴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2024년 중반부터 금리가 인하될 전망
- 하방 위험요인은 은행의 자산 건전성 악화, 2024년 총선으로 인한 재정통합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지연 등
 - 반면에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주요 파트너와의 자유무역협정의 빠른 체결 및 서비스 통합이 진행될 경우, 모든 부문에 신뢰가 높아지고 이익이 증가

○ (정책제안) 기후변화와 성별격차에 대한 맞춤형 정책 필요

-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며 기후 변화로 인한 손실을 감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홍수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같은 즉각적 조치가 필요
 - 인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도 갠지스 평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는 극심한 폭염에 노출
 - 폭염과 이에 따른 홍수로 매년 약 10만 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추정되며 노동력 손실, 밀 수확량 감소, 가축 폐사율 증가, 정전 등 경제적 비용도 막대함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보건, 교육, 자본에 대한 접근성 등 여러 측면에서 성 평등에 대한 진전이 필요
 -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 지원, 직업 훈련 및 평생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여성의 토지 권리 확보를 통한 경제적 지위 강화 필요

〈표 III-7〉 인도의 경제 및 재정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5.8	9.1	7.2	6.0	7.0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6.2	5.5	6.7	4.8	4.4
재정수지 (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1,2}	-13.1	-10.4	-8.9	-7.9	-7.9
경상수지 (current account balance)	1.0	-1.2	-2.6	-1.8	-1.3

주: 1.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총 재정수지
2. GDP 대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8. 이탈리아

- (경제현황)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천천히 회복하는 중으로 2022년 4분기 침체 이후 2023년 1분기 실질 GDP는 0.6% 증가함
 -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기업 및 소비자 신뢰는 강화하는 중
 - 실업률은 역사상 낮은 수치(historically low)이며,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강한 증가세
 - 활발한 노동시장과 최근의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실질가계소득이 안정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음
 -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의 빠른 반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2년 11월 약 12%에서 2023년 5월에는 8.1%로 낮아짐
- (통화·재정) 재정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차입비용이 상승
 - 유로지역 긴축통화정책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차입비용이 크게 증가했으며, 은행 대출 금리는 지난 한 해 동안 2%p 이상 상승
 - 정부가 막대한 공공 부채를 재융자하는데 드는 비용도 증가하여 2024년에는 부채 상환 비용이 GDP의 약 4%에 달할 것으로 예상

- 2023년 중반부터 에너지 위기가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
 - 기업의 전기요금에 대한 세액공제, 가스 및 전기의 고정요금 인하, 저소득층 대상 소득지원 등 2022년에 채택된 대부분의 에너지 위기 지원 조치는 2023년 상반기까지만 연장
- 에너지가격 하락, 긴축재정 여건, 다소 제한적인 재정정책의 조합은 물가상승 압력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의 완만한 회복을 가능하도록 함
- **(경제전망) 최근 에너지 가격 하락과 경제회복기금(NGEU: Next Generation EU) 관련 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는 2023~24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높은 물가 상승 상황에서 임금 상승률 둔화로 인한 실질 소득의 약화, 에너지 위기와 관련된 재정지원의 중단, 그리고 긴축재정은 민간 소비와 투자에 부담
 - 에너지가격이 하락하여 직접적으로 에너지가격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간접적으로는 기업의 투입비용을 낮춤으로써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금 상승률은 2023~24년에 걸쳐 회복될 것으로 예상
 - 차입비용의 증가는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며, 특히 주택 부문은 '슈퍼보너스' 세액공제 조건의 강화로 인해 타격
 - 민간투자의 약세는 경제회복기금과 관련된 공공투자의 증가로 인한 총 투자의 긍정적 영향을 다소 상쇄할 것
 - 최근의 국제금융부문의 혼란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국가 회복 및 복원 프로그램(NRRP: 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rogramme)의 공공투자 프로젝트 이행이 지연될 경우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음
- **(정책제안) 구조개혁은 성장을 지원하고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핵심**
 - 향후 몇 년간 GDP 대비 부채비율을 지속가능한 경로로 전환하기 위하여 더 많은 재정건전화 정책이 필요할 전망
 - 재정건전화 정책에는 탈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와 공공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 지출 검토가 포함되어야 함

- 국가 회복 및 복원 프로그램의 공공투자 및 구조개혁 계획 이행은 이탈리아의 GDP를 증가시키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는데 추가적 도움
- 중기적으로 GDP를 높이는 데 중요한 공공행정, 사법시스템 및 경쟁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 중
- 정책 우선순위는 실행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실행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대체하고, 국가 회복 및 복원 프로그램의 공공지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실행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강화하는 것

〈표 III-8〉 이탈리아의 경제 및 재정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9.0	7.0	3.8	1.2	1.0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0.1	1.9	8.7	6.4	3.0
실업률 (unemployment rate) ¹	9.3	9.5	8.1	8.1	8.1
재정수지 (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9.7	-9.0	-8.0	-4.1	-3.2
국가채무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185.3	176.2	151.3	147.6	146.4
경상수지 (current account balance) ²	3.9	3.1	-1.2	0.7	0.8

주: 1. 경제활동인구 대비

2. GDP 대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9. 일본

○ (경제현황) 2023년 1분기 실질 GDP는 강한 내수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0.4% 성장

- 1월에 4.3%로 정점을 찍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 도입으로 인해 4월에 3.5%로 하락
- 높은 구인율과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3월 명목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에 그침
 - 최저임금협상(Shunto wage negotiations)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된 임금 3.7% 및 기본급 2.1%의 인상은 향후 더 큰 상승의 모멘텀을 예고
- 높은 물가상승률이 실질 가처분 소득에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뢰도가 상승
 - 특히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가계소비가 꾸준히 증가하여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
- 글로벌 경제 약화로 인해 공급망 차질 완화에도 불구하고 외부 수요 증가세가 둔화
 -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글로벌 통화 긴축이 둔화되면서 엔화 약세가 완화되었지만 무역 적자 규모는 여전히 큼

○ (통화·재정)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는 거시경제 정책

- 일본 정부는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안정 대책을 포함한 2022년 10월 경제 패키지(6조3천억엔, GDP의 1.2%)에 이어 2023년 3월에 비상 예비비를 재원으로 하는 추가 대책(2조2천억엔, GDP의 0.4%)을 시행
 - 2024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조치가 종료되고, 에너지 가격 지원이 점진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재정 지원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
- 반면, 국방예산은 2022년 12월에 발표된 새로운 5개년 계획에 따라 2022년 5조 4,000억엔에서 2027년 약 9조엔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
- GDP 대비 총 공공부채 비율은 2024년에도 247%에 가까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 상승률(신선식품 제외)이 2022년 4월 이후 목표치인 2%를 초과했지만 최근 일본은행은 통화정책 기조와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
- **(경제전망) GDP 성장률은 내수에 힘입어 2023년 1.3%, 2024년 1.1%로 예상**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식료품 및 전기 요금 상승으로 인해 2023년 3분기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대기업의 강력한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이를 부분적으로만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전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작고 시차가 있음
 - 임금 상승이 탄력을 받으면서 근원물가상승률은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24년 하반기에는 2%에 근접할 것
 -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할 것이며 실업률은 2024년에 2.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예상보다 약한 외부 수요와 새로운 공급망 혼란, 통화 및 재정 상황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으로 인하여 하방 리스크가 존재
- **(정책제안)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및 재정적 개혁 필요**
 -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지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수
 - 노동시장 유연성 증가, 개인 파산 면책 범위를 확대하여 절차를 개선, 외국인 직접 투자 장벽을 낮추어 비즈니스 역동성 강화, R&D 지출 목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채택 능력을 지원 등
 - 구조적인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재정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
 - 사회보장 및 세제 개혁, 지출 효율성 개선 등 지출과 세입 모든 측면에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함
 - 동일노동 동일임금, 유연근무제 등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고, 보육 서비스를 개선하여 여성 고용을 촉진한다면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음

〈표 III-9〉 일본의 경제 및 재정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4.3	2.2	1.0	1.3	1.1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¹	0.0	-0.2	2.5	2.8	2.0
실업률 (unemployment rate) ²	2.8	2.8	2.6	2.5	2.4
재정수지 (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³	-9.0	-6.2	-5.9	-5.3	-3.5
국가채무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³	240.4	240.2	245.8	246.9	246.9
경상수지 (current account balance) ³	2.9	3.9	1.9	2.0	2.0

주: 1. 각 연도의 분기별 계절 조정 지수의 합계로 계산

2. 경제활동인구 대비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10. 한국

○ (경제현황)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있으며 2023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3%

- 코로나19 팬데믹 제한 조치가 해제되며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었으나 높은 물가상승률과 금리로 인하여 민간투자는 다소 부진
- 물가상승률은 2023년 4월 3.7%까지 떨어졌으나 근원물가상승률은 서비스 및 공공요금의 상승으로 4.0%를 유지
-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2022년 말에는 중국에 대한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
 - 특히 2022년 초부터 이어진 환율 약세(특히 미국 달러 대비)가 무역 적자를 초래

○ (통화·재정) 거시경제 정책의 긴축 기조 강화

-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2021년 8월 0.5%에서 2023년 1월 3.5%로 10차례에 걸쳐 인상한 후 현재까지 동결

- 정책금리는 2024년 하반기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고,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 재정정책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피한다는 가정 하에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2023년 긴축적으로 운용될 계획
 - 2023년 예산안에서는 재량지출을 축소하여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022년 GDP 대비 5.1%에서 2023년 GDP 대비 2.6%로 축소
- 2024년에는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재정기조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

○ (경제전망) 성장세 약화 전망

- 실질 GDP 성장률은 2023년에 1.5%로 둔화되었다가 2024년에 2.1%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
 - 부채 상환 부담의 증가와 주택 시장 부진이 단기적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에 부담을 주겠지만 2024년에는 수요 증가세가 강화될 전망
 - 물가상승률은 점차적으로 완화되겠지만 서비스 및 공공요금 인상이 2023년 하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목표치를 상회할 것
- 글로벌 금융 혼란이 심화되면 가계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
-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한국 공급망의 재조정을 촉발시킬 수 있음
 - 반면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고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된다면 경제 전망을 개선할 수 있음

○ (정책제안)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

-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재정건전화 진행
 -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재정 압박이 가중되는 것을 제한
-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8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에 대해 취약 계층을 보다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식을 권고

- 실직자를 위한 훈련 및 적극적 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노동력의 원활한 재배치를 유도
- 상품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데 기여
- 여성 고용·출산율 증진을 위한 육아휴직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확대, 방과 후 돌봄 개선 등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마련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식을 맞춰 조정할 필요

〈표 III-10〉 한국의 경제 및 재정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0.7	4.1	2.6	1.5	2.1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0.5	2.5	5.1	3.4	2.6
실업률 (unemployment rate) ¹	4.0	3.6	2.9	3.0	3.3
재정수지 (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2.7	-0.8	-0.6	-0.1	0.5
국가채무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50.0	50.6	53.4	55.0	57.1
경상수지 (current account balance) ²	4.5	4.7	1.7	-0.3	0.3

주: 1. 경제활동인구 대비
2. GDP 대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11. 영국

○ (경제현황) 경제활동 둔화 및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압력의 지속

- 2023년 1분기 추정치에 따르면 3개월 동안 실질 GDP 성장률은 0.1%로 부진
- 2023년 3월까지 3개월 동안의 연간 명목 임금 상승률은 5.8%로 물가상승률(Headline Inflation)과 근원물가상승률(Core Inflation)보다 모두 낮음
 - 구인율은 4월에 10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회복세를 보임
-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에 8.7%로 여전히 높음

- 서비스 및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2023년 4월 근원물가상승률은 6.8%를 나타냈으며 이는 1992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

- 에너지 도매가격의 하락으로 생활비 압박이 완화되었고, 미국 달러 대비 파운드화의 꾸준한 절상으로 수입 물가상승률이 전반적으로 약화

○ (통화·재정)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재정정책도 더욱 제한적으로 변화

- 영란은행은 5월에 기준금리를 4.5%로 인상하였는데 이는 현재 긴축 통화 기조에서 가정된 최종수치(terminal value)인 4.75%에 근접한 수준

- 2023년 2분기까지 은행금리가 4.5%에 이르고 전망기간 내내 이 수준을 유지하며 긴축적 통화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 2024년 하반기까지 긴축적 통화정책이 계속될 전망이며 근원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수렴하는지에 따라 3분기와 4분기에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5bp씩 인하할 예정

- 정부는 차입 비용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5년 내에 공공 부채를 줄인다는 국가 재정 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2023~24년 동안 재정 기조는 제한적

- 정부의 2023년 봄 예산안에는 에너지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중 일부는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2023년 3분기에 폐기될 것으로 예상

- 2023년 봄 예산안에는 육아 보조금과 연금세액 공제, 즉시공제(full-expensing) 투자 보조금 등이 포함

○ (경제전망) GDP는 2023년에 0.3%, 2024년에 1.0% 증가

- 민간 지출은 에너지 가격 하락, 연금 및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UC)과 같은 혜택의 상향 조정, 노동 참여 증가, 글로벌 경제 여건 개선으로 강화될 것

- 물가상승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득 증가세가 약해 소비에 부담을 주고, 긴축 통화 정책으로 주택 시장과 부진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둔화되며, 불확실성으로 인해 무역이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계속 줄어들 것

- 노동 시장 조건의 점진적 완화로 명목임금의 상승이 제한됨에 따라 실질임금은 2023년에 정체된 후, 2024년부터 물가상승률 하락으로 인해 상승할 전망

- 정부적자는 재정건전화와 높은 성장률로 인해 2022년 GDP 대비 5.2%에서 2024년 GDP 대비 3.5%로 개선
- 공공부채에 대한 높은 이자 부담과 최근에 만기가 도래한 국채의 증가로 인하여 채권 수익률 변동 위험에 노출되고, 전쟁으로 인한 도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 압박과 같은 위험도 존재

○ (정책제안) 노동 공급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최우선

- 9~24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 30시간의 무상 보육을 제공하여 노동 시장 참여와 잠재적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득의 성별 불평등을 줄이고자 함
 - 노동 시장 참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여전히 취약하며, 여성은 돌봄 책임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높음
- 에너지 요금 지원 정책은 일반적인 사회 안전망을 통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에만 초점을 맞추고 점진적으로 철회되어야 함
- 투자 조건과 미래 무역 관계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고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필수적

〈표 III-11〉 영국의 경제 및 재정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11.0	7.6	4.1	0.3	1.0
소비자물가지수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	0.9	2.6	9.1	6.9	2.8
실업률 (unemployment rate) ¹	4.6	4.5	3.7	4.2	4.5
재정수지 (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13.1	-8.0	-5.2	-4.8	-3.5
국가채무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105.6	105.9	101.0	102.5	103.8
경상수지 (current account balance) ²	-3.2	-1.5	-3.8	-3.9	-3.7

주: 1. 경제활동인구 대비

2. GDP 대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

12. 미국

- (경제현황) 2023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3%로 전 분기의 2.6%에 비해 둔화
 - 주택투자는 더욱 감소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재정 상황의 침체를 반영
 - 총 고용은 계속해서 강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건설 및 제조업과 같이 금리에 민감한 분야에서는 이러한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음
 - 명목 임금 상승률은 다소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but remains high by historical standards)
 -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은 2022년 중반의 7%를 정점으로 2023년 4월 전년 동기 대비 4.4%까지 떨어짐
 - 코로나19 팬데믹 제한 조치 완화 이후 중국 경제의 회복세,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 국내 휘발유 가격 하락 등 대외 상황의 변화는 경제 성장에 큰 도움

- (통화·재정)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는 더 이상 경제를 부양하지 못함
 -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여 계속해서 긴축 통화정책을 펼침
 - 연방기금 금리는 5%~5.25% 범위로 인상되었으며 중앙은행의 재무부 증권, 기관 부채 및 모기지 담보부 증권 보유는 계속 감소
 - 3월에 몇몇 지역 은행이 붕괴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는 금융기관에 단기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
 - OECD 전망은 향후 몇 달 내에 연방기금금리가 25bp 추가 인상되고, 정책 금리는 2024년 하반기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다가 완화된다고 가정
 - 2023~24년 누적 재정건전화(a cumulative fiscal consolidation)규모는 GDP의 약 1%에 달한다고 가정
 - 향후 몇 년 동안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계속된 시행으로 GDP 대비 공공 투자의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수요에 미치는 총체적인 영향은 2024년까지 제한될 것이며, 다양한 기후 및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출과 의료 보조금 확대는 최저 법인세 도입으로 상쇄될 것으로 예상
- 연방 정부는 1월에 부채한도인 31조4,000억달러에 도달했고, 이후 재무부는 재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특별조치(extraordinary measures)'를 제정
 - 2025년까지 부채한도를 유예하고 향후 2년간 재량 지출을 제한하기로 한 최근 합의에 따라 2024년 정부지출은 GDP의 0.2%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경제전망) 실질 GDP 성장률은 2023년에 1.6%, 2024년에 1.0%로 예상되며 경제성장은 약화될 전망
 - 통화 및 재정 여건이 위축되고, 초과 저축이 고갈됨에 따라 민간소비 및 투자에 대한 지출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실업률은 2024년에 4.5%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며,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물가상승률은 2024년 말까지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목표치인 2%로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비용 상승은 하방위험으로 존재하나, 노동수요 감소가 예상보다 빠른 임금상승률 하락을 야기한다면 물가상승률의 신속한 안정화의 가능성도 있으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통화 정책도 조기 완화 될수 있음
- (정책제안) 보육 서비스 접근성 개선으로 성 평등을 촉진할 것
 - 재정적자를 더 줄이면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
 - 기후 전환은 여전히 중요한 우선순위 과제이며, 향후 몇 년 동안 추가적 규제 변화, 녹색 투자, 구조 개혁 및 탄소 가격 책정 등이 필요
 -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격차가 큰 상황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
 - 연방정부는 보육 서비스 제공에 대한 최소한의 연방 기준을 제공하고, 주 정부는 전체에 걸쳐 통일된 보육 센터의 등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용 가능한 보육의 질을 더 잘 보장

〈표 III-12〉 미국의 경제 및 재정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2.8	5.9	2.1	1.6	1.0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deflator)	1.1	4.0	6.2	3.9	2.6
실업률 (unemployment rate) ¹	8.1	5.4	3.6	3.7	4.4
재정수지 (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14.9	-12.1	-4.2	-5.1	-5.1
국가채무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133.3	126.2	121.2	121.3	123.3
경상수지 (current account balance) ²	-2.9	-3.6	-3.7	-3.3	-3.3

주: 1. 경제활동인구 대비
2. GDP 대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3*